

희망의 새시대

**행복하고 풍요로운 농업·농촌
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.**

=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 =

2014. 2. 24.



희망찬 농업, 활기찬 농촌, 행복한 국민
농림축산식품부

☐☐ **목 차** ☐☐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2013년 평가 및 2014년 정책 여건 | 1 |
| II. 2014년 정책 방향 | 9 |
| III.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| 15 |
| 1. 경쟁력 제고 | |
| (1) 6차산업화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| 17 |
| (2) ICT·BT 융복합으로 첨단산업화 | 22 |
| (3) 개방화 대응 및 수출 확대 | 29 |
| 2. 소득·복지 향상 | |
| (4) 농가 소득안정장치 강화 | 36 |
| (5) 농업재해 대응력 강화 | 42 |
| (6) 생활체감형 농촌 복지서비스 향상 | 51 |
| 3. 수급·유통 개선 | |
| (7) 안전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| 57 |
| (8)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| 65 |
| (9) 국제농업협력 및 해외농업개발 확대 | 71 |
| IV. 일하는 방법 전환 | 77 |
| 1. 경영체 DB 활용을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 | 79 |
| 2. 지역과 경영체의 자조자립 노력 및 책임성 제고 | 83 |
| 3. 위기 극복을 위한 역량 결집 및 협업 강화 | 86 |

I . 2013년 평가 및 2014년 정책 여건

1. 2013년 국정과제 평가
2. 2014년 정책 여건

1. 2013년 국정과제 평가

가 성과

□ 새 정부 5년간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」 마련·추진으로 농정신뢰 상승

- 농정 철학 및 비전 설정으로 농정방향 부재에 따른 혼란 차단
- 국민공감농정위원회 구성·운영('13.4~)을 통해 국정과제 구체화 및 농업·농촌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 도모
 - * 정책고객 대상 인식조사 결과('14.1) : 양호 53%, 보통 31%

⇒ **소통과 공감으로 한중 FTA, TPP,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등 위기상황에 대응한 국정 2년차 추동력 확보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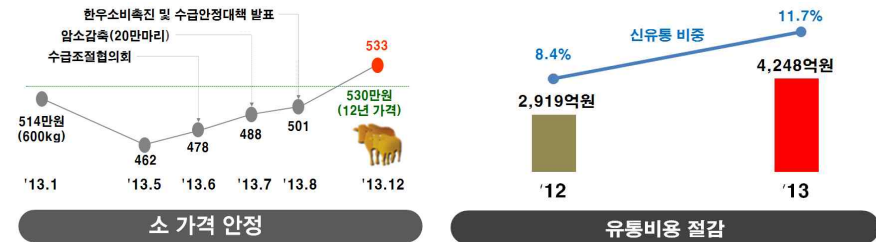
□ 자율·합의·소통을 통한 핵심 국정과제 성과 창출

- 농업인 의견수렴을 통한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(51품목 → 56) 및 보장재해범위¹⁾ 확대, 맞춤형 홍보강화²⁾ 등으로 가입률 증가³⁾
 - 1) 태풍·우박·집중호우 → 겨울 동상해 등 모든 자연재해, 鳥·獸害, 화재
 - 2) 홍보대상을 특화하여 농촌지역민방, 농업전문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정책내용 홍보
 - 3) 농작물/가축 재해보험 가입률 : ('12) 13.6% / 71.4% → ('13) 19.1 / 77.3
- 전문손해평가 인력 육성(426명)으로 재해발생시 피해조사기간 단축 및 전문성 향상, 조사지연 문제 해소와 신뢰도 향상
- 신뢰와 원칙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주요농산물 가격안정
 - 생산자·소비자 참여와 합의에 의한 자율적 수급조절위원회 운영
 - * 주요채소 가격안정대 설정·운영, 수급조절을 위한 어미돼지 자율감축, 할당관세(TRQ) 활용 수입확대 등 인위적 정부개입 자제로 유통시장 신뢰 획득
 - * 배추·무 등 5대 채소류 전월대비 가격변동률 : ('12) 14.0% → ('13) 12.9

○ 병해충·재해 예방 등을 통한 안정적 생산, 수확기 산지·소비자 유통업체와 협력 등을 통해 식량의 안정적 공급

- *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 증가 : ('12) 473kg/ha → ('13) 508
- * 수확기(10~12월) 쌀값 : ('12) 173,692원/80kg → ('13) 175,280(0.9% ↑)

○ 직거래 인프라 확충, 산지 조직화 등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유통비용 절감



⇒ **과제별 성과 핵심요인을 토대로 국정과제 가시적 성과 창출**

나 반성

□ 농업경영체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·평균적 재정집행으로 투융자 성과관리 미흡, 중앙정부 의존성 심화 등 농정성과 제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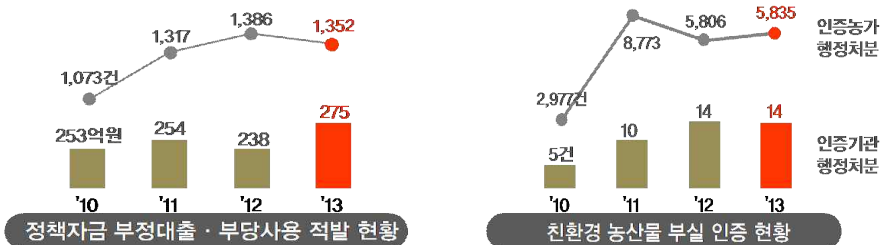
⇒ **지역특성 및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농정으로 획기적 전환**

- * 전업농(재해보험, 직불제 등 소득안정장치 강화), 중소농(공동체농업, 6차 산업화), 영세고령농(사회안전망 강화)
- * 교육을 통해 농업인 역량·자율성 제고 및 책임성 강조

□ 고질적 비정상 사례 발생 등으로 “밀빠진 독에 물 붓기 비난”

○ 면세유류 부정 사용, 농업보조금 부정 수급, 산하기관 부정인사 등 비정상 사례 발생으로 농정 신뢰 하락

-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부실 인증 등으로 우리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저하



⇒ 재정 누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필요한 곳에 집중 지원

- 위기관리 미흡으로 국민 불편 초래

- 철저한 사전준비 부족, 국제 여건 변화에 대한 적기 대응 실패 등으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지연

* 국제곡물시장 활황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, 협업을 추진한 국내기업의 경영악화 등으로 당초 계획했던 민관합작 곡물유통기업 설립 실패

- 해외농업개발(125개 기업이 25개국에 진출하여 7만ha 개발) 등으로 곡물 확보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반입량은 저조

- 고병원성 AI가 2003년 최초 발생 이후 2~3년마다 재발

* '14.1.16일 발생 이후 2.22일 현재 총 23건 발생(오리 15, 닭 8)



⇒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새로운 접근법으로 성과 향상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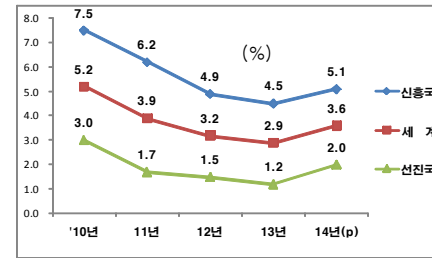
2. 2014년 정책 여건

- 세계 경제 회복세 등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저성장 기조 지속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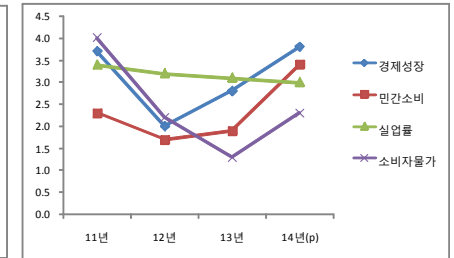
- 국내 경제는 경제성장률 회복, 일자리 증가 등으로 전반적인 내수 경기 회복세가 전망됨

- 미국 양적완화, 엔저 등 영향으로 대일 수출비중 높은 품목분야, 규모화된 경영체 · 법인의 경영 악화 요인 상존

<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(IMF) >



< 한국경제 전망(KDI) >



- 저 성장에 따른 세계 농식품시장에서의 국가간 경쟁 심화 등으로 차별적·미래지향적 농업구조로의 전환이 과제로 대두

- 호주 · 뉴질랜드 · 캐나다 FTA, 한 · 중 FTA 2단계 협상 등으로 농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더욱 확대될 전망

-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상 발생 빈도 및 강도의 증가는 기후 취약산업인 농업의 주요 위협요인으로 대두

- 폭우 · 폭설 · 폭염 등 빈발에 따른 농업재해 뿐만 아니라 농작물 병충해·가축질병 증가로 농가의 경영위험이 더욱 커짐

* 대형 기상이변(연평균): ('81~'90) 12.7회 → ('91~'00) 19.2 → ('01~'08) 24.5

* '12년에 강추위로 작물 동해, 100년만의 가뭄, 연속 3회 태풍상륙 등 재해 발생

○ '13년 작황 호조에 따른 생산량 및 재고량 증가로 **국제곡물가격은 당분간 안정세 유지 전망**

* '13/'14년 곡물생산량은 전년대비 8.2% 증가한 24.4억톤 전망('14.1월, USDA)

□ 과학기술의 발달로 농업 및 전후방산업과 ICT·BT **융복합** 촉진

○ 농산물 생산·가공·유통 및 농촌관광 등에 ICT를 적용,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**미래 성장산업**으로 발전될 전망

□ 인적·물적 자본의 유출, 농촌인구의 **고령화** 및 **과소화** 지속 등으로 농촌의 성장 잠재력이 더욱 약화될 전망

○ 고령자 및 독거노인가구(65세이상 1인가구), 다문화 가족, 귀농·귀촌인구 증가로 농촌 생활여건 개선 및 **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**

* 농촌인구 중 65세이상 비중 : ('00) 14.7% → ('05) 18.6 → ('10) 20.9

* 농촌인구 중 독거노인 비중 : ('00) 9.1% → ('05) 11.7 → ('10) 13.3

○ 세수 감소, 보편적 복지 분담 증가 등으로 **취약해진 지방 재정**은 농촌정책 추진의 애로요인이 될 전망

* 최근 5년간 사회복지지출 증가율(9.6%)이 지방예산 증가율(4.3%)의 2.2배

□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확산과 건강·휴양 등 **고차원적 욕구** 표출은 우리 **농업·농촌 발전에 좋은 기회로 작용**

○ 건강·참살이·환경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로 **기능성·고품질·친환경·소포장 농식품 수요 증가**

○ 전 국민의 **쉼터, 삶터 및 일터**로서의 농촌의 역할에 대한 기대 상승과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활성화는 새로운 활력 창출 요인

○ 청장년층 고용 불안이 지속되면서 청년층 농촌 창업, **베이비부머 귀농·귀촌** 인구 유입 증가세 유지 전망

Ⅱ. 2014년 정책 방향

1. 2014년 핵심 과제
2. 2014년 정책 방향

1. 2014년 핵심 과제

| 국정과제 | 실천계획(100대 과제) (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) | 여건 | 3대전략 9대 핵심과제 |
|---------------|---|---|---|
| 12. 미래성장산업화 | ICT·BT 융합 지역농업 조직화 농업전문인력 양성 전후방산업 육성 농식품 수출확대 | 급속한 개방화 • 쌀관세화 FTA • 농업피해 우려 • 수출시장 확대 기회 | 경쟁력 제고 1 농업의 6차산업화 2 ICT·BT 융복합으로 첨단산업화 3 개방화 대응 및 수출 확대 |
| 31. 농가 소득증대 | 농가 경영여건 개선 사전예방적 경영위험관리 공동체 경영 및 소득원 창출 직불제 확충, 에너지물류농업 | 기후변화 고령화 • 도농간 소득격차 지속 • 농촌 복지수요 증가 | 소득·복지 향상 4 농가 소득안정장치 강화 5 농업재해 대응력 제고 6 체감형 농촌 복지서비스 향상 |
| 52. 복지농촌 건설 | 생활 체감형 복지 확산 복지 사각지대 해소 농촌주인 서비스 향상 지역행복생활권 구축 농촌활력 창출 | 소비패턴 변화 • 안전·고품질 농식품 • 소포장·통신판매 선호 | 수급·유통 개선 7 안전 농식품 안정적 공급 8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9 국제농업협력 및 해외농업개발 |
| 39. 식량수급체계 구축 | 농업생산기반 구축 친환경농산물 확대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국민영양 및 식생활 교육 | | |
| 32. 유통구조 개선 | | | |

- ◆ 위기 : 농산물 수입 증가, 농업성장 정체, 농기자재·유류비·인건비 등 경영비 증가, 자연재해/가축질병 빈도·강도 증가 등
- ◆ 기회 : 과학기술의 발달 및 융복합, 고품질·안전 농식품 수요 증가, 휴양·전통문화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증가 등

-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국정 2년차 국정과제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해,
 - 농정의 3대 축(경쟁력·소득·복지)을 중심으로 100대 과제 중 금년에 중점 추진할 3대 전략 및 9대 핵심과제 선정·추진
 - (전략 1) 급속한 개방화 대응 농식품산업 경쟁력 제고
 - * 농식품산업과 관광 등을 결합한 6차산업 육성, ICT·BT 융합으로 농업의 첨단산업화, 개방화 대응 및 농식품·농기자재·농업기술 수출 확대
 - (전략 2) 생산비 증가, 기후변화 및 고령화 심화 대비 농가 소득안정장치 강화 및 생활체감형 농촌 복지서비스 향상
 - * 공동체 경영 등 경영비 절감, 직불제 확충 등 경영안정장치 강화, 자연재해 및 가축질병 대응력 향상, 농촌 어르신 체감형 복지 확충 등
 - (전략 3) 고품질·안전·편의 농식품 선호 등 소비패턴 변화에 맞춰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식품 공급·유통체계 구축
 - * 식량자급률 향상, 친환경·안전 농축산물 생산·소비 확충, 신유통 확산 및 생산자단체의 수급조절 기능 강화, 국제농업협력 및 남북농업협력 강화
 - 지난해 마련한 5년간 국정과제 로드맵의 체감 성과 확산을 위해 유관기관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고 일하는 방법 전환
 - 지난해 국정과제 추진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성과 요인은 확산, 미흡한 점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보완·발전

- 지난해 농식품분야 5대 국정과제*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(‘13~’17)」 수립(‘13.10)
 - * ① 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, ② 농가 소득 증대, ③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, ④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, 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 건설
- 새 정부 농정비전(행복한 농업, 활기찬 농촌, 행복한 국민) 실현을 위한 100대 과제를 선정하여 5년간 로드맵 마련·추진 중
- 신뢰와 원칙에 기반한 수급관리로 농산물 가격안정, 농업재해 대응 경영안정장치 확충 등 일부 국정과제 가시적 성과 창출
- '14년은 영연방3개국 FTA, 한·중 FTA, 쌀 관세화 유예 종료, TPP 등 농업통상 현안이 집중되면서 농업계의 불안감 지속

2.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한 2014년 정책 방향

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국민

효율성을 기반으로
소통과 배려의 농정 추진

| 전략목표 1 | 전략목표 2 | 전략목표 3 |
|---|--|--|
| 경쟁력 제고 | 소득복지 향상 | 수급유통 개선 |
| ① 6차산업화로 입지리와 부가가치 창출 ② ICT-BT 융복합으로 첨단산업화 ③ 개방화 대응 및 수출 확대 | ④ 농가 소득안정장치 강화 ⑤ 농업재해 대응력 강화 ⑥ 생활체감형 농촌 복지서비스 향상 | ⑦ 안전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⑧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⑨ 국제농업협력 및 해외농업개발 확대 |

| 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추진 기반 | 성과창출 및 농정신뢰 회복을 위한 스마트농정체계 구축 | | |
| | 경영체 DB 활용 비정상적 정상화 | 지역과 경영체의 자조·자립·책임성 제고 | 위기 극복을 위한 역량 결집 및 협업 강화 |

| 정 책 여 건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급속한 개방화 | 기후변화/고령화 | 소비패턴 변화 |
| 농업피해 우려 수출시장 확대 | 도농간 소득격차 지속 농촌 복지수요 증가 | 안전 고품질 농식품 소포장·통신판매 선호 |

Ⅲ.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경쟁력 제고

1. 6차산업화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
2. ICT·BT 융복합으로 첨단산업화
3. 개방화 대응 및 수출 확대

소득·복지 향상

4. 농가 소득안정장치 강화
5. 농업재해 대응력 강화
6. 생활체감형 농촌 복지서비스 향상

수급·유통 개선

7. 안전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
8.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
9. 국제농업협력 및 해외농업개발 확대

1. 6차산업화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[국정과제 12-1]

< 목 표 >

◆ 지역별 특화자원을 중심으로 생산·가공·유통·관광·휴양을 융복합한 6차산업 확산을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

1 정책 핵심 내용

- 농촌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발전기반 마련 및 젊은 층의 귀농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새로운 활력 창출
 - 농촌의 자원을 융·복합하는 농촌경영체의 창업 및 성장을 돕는 현장중심 지원체계 구축 및 정책 인프라 마련
 - 소비자 구미에 맞는 다양한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개선, 음식관광 자원화 등을 통해 농촌 관광의 고부가가치화 추진
 - 청년층을 위한 체계적 귀농프로젝트 추진, 일자리 정보 제공 강화,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체계적 인력 유입 도모

2 그간의 성과

6차산업화 촉진기반 마련

- 우수사례 발굴·전파, 정책 체계화로 6차산업화 확산 여건 형성
 - 맞춤형 지원을 위한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방안 마련(6월) 및 농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안) 국회 제출(10월)
 - * 농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제출('13.10), 법안소위 계류중
 - * 6차산업화 신규예산 확보 : '14년 신규(8개 세부사업, 183.5억원)

- 6차산업화 우수사례 발굴·홍보 강화로 공감대 확산
 - * 우수사례(35건) 가이드북 발간(1천부),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'6차산업 박람회' 성공적 개최(86천명 참여)
- 지역 특화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전략산업 기반 구축
 - * 특화농공단지 조성(누계) : ('12) 17개소 → ('13) 22개소
 - * 지역전략식품산업단/향토산업 : ('12) 67개소/157개소 → ('13) 67/184
 - *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할 88개 업체와 투자 MOU 체결
- 6차산업화 특수목적 펀드 등 농식품 펀드 결성(6개분야, 750억원)

농촌 체험·관광 활성화

- 농촌관광 수요 증대에 대응하여 농촌관광 인프라* 조성 지속 추진
 - * 농촌 체험·휴양마을(방문객/매출액) : ('12) 700개(884만명, 917억원) → ('13) 803개(1,052만명, 985억원)
- 농촌관광 품질 개선을 위한 농촌 관광 등급제* 실시
 - * 경관·서비스, 체험, 숙박, 음식 부문을 평가, 부문별로 1·2·3·등의 부여(200개소)
- 향토음식점(농가맛집 등) 지정('12: 74개소 → '13: 83), 찾아가는 양조장(2개소) 및 종가음식 체험프로그램(2개소) 신규 도입

귀농·귀촌 활성화 추진

- 귀농귀촌종합센터·창업박람회를 통한 정보제공·상담, 교육·실습 지원 및 창업자금 지원에 힘입어 귀농가구수는 '12년 수준 전망
 - * 귀농 가구 증가 : ('11) 6,541 → ('12) 11,220
- 베이비 부머, 중장년층 직업의 대안으로 귀농·귀촌 부각
 - * 2012년 귀농가구 평균은 52.8세이며 40·50대가 전체의 63% 차지

3 장애요인 및 개선할 점

- 6차산업화 추진 농업인에 대한 현장밀착적 지원체계 미흡
 - 경영 다각화를 원하는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정보제공 부족
 - * '13년 농업·농촌 국민의식조사(KREI) 결과 농업인의 48%가 6차산업화 잘모름
 - 6차산업화 농업인의 현장 애로사항을 적기 해소에 한계
 - 신속한 애로사항 파악이 어려워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미흡
 - * 농식품부 조사('13.6)시 자금조달(26%), 판로확보(16.3%)순, KREI 조사('13.12)시 판로개척(34.2%), 재무·회계(17.5%)순으로 애로사항을 꼽음
- 농촌관광 소비자 만족도가 낮고 청소년 체험 위주로 고객층이 제한되어 지속적인 성장·발전의 걸림돌
 - 다양한 관광자원 연계형 프로그램 부족으로 체류형 관광 비중이 낮음('11년 숙박비율 : 농촌관광 53.6%, 국내관광 70.4%)
 - 제한된 고객(학생)을 대상으로 한 가격 경쟁으로 인해 저가화
 - * 농촌관광 총량은 국내관광의 4.1%를 차지하나, 지출액은 1.2%에 불과
 - 농촌관광의 낮은 서비스 수준*과 전문여행사 등 관광채널의 부족은 도시민의 농촌관광 선택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
 - * 농촌관광의 마을·자원 매력 만족도는 높으나, 프로그램·콘텐츠 만족도는 낮음
- 귀농초기 일자리·주택·농지 확보 어려움, 귀농 후 도시로의 재이주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 사례 발생
 - * '10~'12년에 전북도로 귀농귀촌한 4,411세대 중 365세대(8.3%)가 도시재이주
- 유의미한 비율을 차지하는 청년층(20·30대) 귀농 확대 필요
 - * 30대 이하 귀농가구수(비율) : ('11) 1,202가구(11.9%) → ('12) 1,292(11.5)

4 2014년 중점 추진계획

- ❖ 6차산업화 확산을 위한 현장중심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젊은층의 귀농 창업을 촉진하여 농촌 일자리 창출

6차산업화 현장밀착 지원강화

- 지역 특화자원 발굴 및 관련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및 창업촉진 컨설팅, 현장 멘토링 등 지원체계 정립
 - 6차산업화 창업, 마케팅 등 정보를 농업인에게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(1월)·광역단체별(3월)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·운영
 - 6차산업화 창업매뉴얼 및 정책매뉴얼 발간·배포(2월)로 농업인 등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정보 제공
 - 6차산업화 전문 사이트를 개설(7월)하여 온라인 지원·상담 병행
- 창업·경영 컨설팅, 투자유치 등 성장단계별 현장애로 해소 지원
 - 사업 계획수립, 상품화, 마케팅까지 농업인·기업의 애로사항 진단 및 대응방안 제시를 위한 경영·컨설팅 지원('14: 15억원)
 - 농식품 펀드 추가조성(8개 분야) 및 투자로드쇼 개최를 통해 사업화에 필요한 민간투자 확대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
 - * 농업인·기업 현황, 추가 정책수요 발굴위한 6차산업 경영체 실태조사(9월)
 - 공동가공시설 설치, 창업코칭 등을 통해 창업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확충('13: 16개소 → '14: 22)
- 6차산업화지구 신규 조성('14: 3개소), 지구내 덩어리 규제완화 및 관련사업 연계 지원(공동이용시설 설치·운영, 공동 홍보·마케팅 등)
 - * 토지이용, 원료사용, 표시 관련 덩어리규제 정비

귀농·귀촌 조기 정착 지원 강화

- 귀농 희망 청년층을 위한 체계적 귀농프로젝트 시범 추진
 - 청년층 대상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, 선도농가와의 멘토링 지원, 농지은행과 연계 농지임대·정책자금 우선 지원
 - 농식품법인연합회 등과의 연계를 통한 농촌 일자리 정보 제공
- 농업·농촌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·현장실습 강화
 - 체험·교육 통합형 「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」 본격 운영
 - 도시로의 재이주 실태 등을 조사하고 유형별 대책 마련(12월)

농촌관광의 고부가가치화

-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테마 중심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
 - 관계기관(문체부, Korail, 관광공사, 교육청 등)과 협업으로 체험·관광 상품 개발·홍보, 권역별 공동 마케팅 등 추진
 - * 각 교육청과 연계하여 '1교-1체험마을' 결연 추진
 - 농촌마을과 지역관광 자원(축제, 야생화, 유적지, 지역특산물, 승마 체험장 등)을 연계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 유도
 - 찾아가는 양조장(10개소), 대장금 등 궁중음식체험식당 지정(10개소) 및 고택·종택음식 체험프로그램 확대
 - 휴양림(19개소), 치유의 숲(25개소), 유아숲 체험원(8개소) 등 산림 휴양·치유 공간 확충
- 농촌관광 서비스 개선, 정보제공 강화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
 - 농촌관광등급제 적용 확대('13: 200개소 → '14: 300), 산림복지서비스업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
 - * 농어촌민박 사업자 준수사항(위생·안전기준)을 규정하여 서비스수준 개선 도모
 - 농촌관광종합포털(웰촌) 개편 및 인터넷 쇼핑물에 여행상품 입점, 맛 지도·달력(5월) 제작·보급 등을 통해 접근성 향상

2. ICT·BT 융복합으로 첨단산업화 [국정과제 12-2]

< 목 표 >

- ◆ 농업과 ICT·BT간 실효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, 정책·예산·농업현장이 선 순환하는 기반 조성

1 정책 핵심 내용

- 농림식품 부가가치 연 3% 성장을 견인하는 R&D 투자 실현
 - 고질적인 농정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강화 및 체감형 성과모델 확산
 - 기술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R&D 개발기술의 실용화·산업화 촉진
- 농산물 생산·가공·유통 및 농촌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ICT·BT 융복합 성공모델 개발·확산 추진
 - * ICT 융복합 농장(7,000개소), ICT 활용 유통업체(100개소) 육성(~'17)
- ICT 융복합 원예시설,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시설 등 고효율 생산기반 확충으로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

2 그간의 성과

R&D 투자확대

- 지속적인 R&D 투자확대로 농식품분야의 과학기술 수준 향상
 - * 농식품분야 R&D : ('10) 6,699 억원 → ('12) 7,983 → ('13) 8,439
 - * 과학기술수준('12) : 미국 100%, 일본 92, 한국 71
 - * 특허출원 / SCI논문 : ('12) 1,433건 / 1,150건 → ('13) 1,982건 / 1,678건
- 기술개발자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'농림식품 신기술 인증제도' 도입('13.6)

농업과 ICT 융복합 모델 마련

- 농업시설(온실·과수·축사 등)과 재배·사양관리를 원격·자동 제어하는 ICT 융복합 모델 개발('10~'13, 21개 과제)

* 시설원예(노동비 20%↓, 생산성 30%↑), 양돈(MSY 3.2두↑, 생산성 17%)

-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수출확대 및 에너지 비용 등 절감

* 시설원예 농산물 수출액: ('05) 146백만\$ → ('10) 231 → ('13) 243

* 난방유 비중: ('05) 65% → ('10) 63%(120만㎥) → ('13) 57%(97만㎥)

종자·종축산업 인프라 구축

- 방사선육종연구센터 건립('13.11) 등 육종기반 조성 및 수출 전략형 종자개발을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 추진('13.7~)

- 장미, 국화 등 59개 신품종 개발·보급으로 종자 로열티 절감

* 농가 로열티 지불액: ('12) 176억원 → ('13) 162(△ 14억원, 8%)

* 딸기 국산품종 점유율: ('06) 17.9% → ('13) 78%

- 지속적인 가축개량을 통해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

* 소득증대 효과('13년): 4,986억원(한우 2,560, 젓소 2,076, 돼지 350)

3 장애요인 및 개선할 점

- R&D 투자증가로 기술수준은 향상되고 있으나, 현장과 괴리된 연구 등으로 농업현장에 적용 및 농립업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

* 농립업 부가가치: ('10) 24.6조원 → ('11) 26.4 → ('12) 26.7

- R&D 사업이 국정과제 및 농정목표와 연계 없이 소규모 백화점식 지원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에 한계

- 정부의 농식품분야 R&D 투자 대비 민간 R&D 투자가 미흡

* 국가전체 R&D 투자대비 민간 R&D 투자비중은 74%인 반면, 농림식품 민간 R&D 투자비중은 26%수준에서 정체

- 첨단 농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ICT 융복합 확산 기반 취약

- 농식품분야 ICT 융복합 현장 전문가가 부족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체계 미흡으로 확산 저조

* 기술지원, A/S 미흡으로 고가 장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

* ICT 융복합모델 현장 확산율('13): 자동화 온실 16%, 자동화 축사 29%

- 첨단기술에 대한 경험부족 및 기대효과 불확신, 초기 투자비용 부담 등으로 현대화 시설 투자 미흡

* 1ha 비용: (유리온실) 30억원, (지열) 2.8(자부담) → 총 32.8억원 소요

- 현장에 적용 가능한 사업성이 있는 기술개발보다는 연구자 중심의 R&D 기획·평가를 함에 따라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·실용화 미흡

* 기술이전·사업화율: ('10) 36.5% → ('12) 31.3 → ('13) 33.5

- 보유하고 있는 생명자원은 많은 반면 산업적 활용은 초기단계로,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

* 농업생명자원: 27만점 보유(세계 6위), '14년 현재 3,402개 신품종 개발

- 신품종 개발에도 불구하고 해외 채종지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종자 수출 감소('12: 45백만불 → '13: 41), 최근 종축 개량속도 저하

- 육묘가 종자산업법상 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종자와 달리 저품질 육묘 유통 등에 대한 관리체계 및 분쟁 해결장치 미흡

4 2014년 중점 추진계획

- ❖ R&D 성과가 상용화·실용화 될 수 있도록 농정현안 해결을 위한 **50대 핵심전략기술개발**에 집중·투자, 부가가치 3% 성장 견인
 - * 농식품 부가가치액 : ('12) 56조원 → ('14) 59조원 → ('17) 67조원
- ❖ 지난해까지 개발된 **ICT 융복합 성공모델이 농업 현장에 보급·확산** 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
- ❖ 연구개발 성과가 **현장에서 실용화** 될 수 있도록 기반 구축

현장문제 해결형 R&D 집중 투자

- 농진청·산림청 역량을 결집하여 **해묵은 7가지 당면과제*** 해결
 - * 7대과제 : ① 가축분뇨자원화, ② ICT 활용 채소류 수급·유통 고도화, ③ 농업에너지 절감, ④ 곡물·조사료 자급률 제고, ⑤ 중국 수출 기술, ⑥ 농업의 6차 산업화, ⑦ 산림자원 고부가가치 창출
- 과학기술 기반 **창조농업 T/F 운영**을 통해 「정책 - R&D - 현장」 연계형 성과모델 확산('14~'16)
 - 성공모델의 입증·확산을 위해 이행점검단 구성 및 점검(분기별)
- 과학기술기반 **창조농업 촉진대책** 마련(3월)
- 국민과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시급한 핵심현안 해결과 **국정과제 및 농정목표** 달성을 위한 **50대 핵심전략기술**에 집중 투자
 - 시설원예 경영비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술, 첨단지능형 정밀농업 기술, 골든시드프로젝트, 축산물 생산성 향상 기술 등
 - * 50대 핵심기술 투자 규모 : ('13) 4,078억원 → ('14) 4,689(15%증)

□ 부처·국가간 공동연구 및 개방형 연구체계 강화

- ICT 융합을 통한 '창조비타민 프로젝트(4개 과제, 미래부 주관)' 및 '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 사업'('14~'21, 383억원) 본격 추진
- R&D 관련 국제교류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**한·EU 연구혁신센터**에 농식품분야 전문가 참여(4월)

ICT 융복합 성과모델 확산

- 기술개발 및 현장실증을 통해 **성과가 검증되고, 파급효과가 큰** 시설원예·과수, 양돈을 중심으로 **ICT 융복합 모델 확산** 추진
 - * 스마트온실(1,000호, 330ha), 과수(200호, 200ha), 지능형축사(80호, 8만두)
- **높은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지원 강화**
 - ICT 자동제어 등 융복합 시설(1,280호), 축사시설(1,187호, 3,817억원)
 - 고효율·에너지 절감형 첨단온실 등 설치 지원(1,250ha, 2,000억원)
- 농업경영체의 **현장 활용도 제고**를 위해 **시설건설팅 및 실습형 ICT 교육농장** 지정·운영(3월, 3개소)
 - 사전준비·운영·확인점검 등 3단계의 체계적 기술건설팅 추진
 - 현장 애로사항 해결 및 체계적 지원 등을 위해 **분야별 전문가 자문단** 운영, 거점지원센터 등 **현장밀착형 지원체계** 마련(6월)
- 고비용이 소요되는 스마트온실 등 시설현대화 추진 시 농업인의 자금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**농신보 보증한도 확대**(3월)
 - * (현행) 개인 10억, 법인 15억원 → (한도확대) 개인 30억, 법인 50억원

민간투자 확대 및 R&D 실용화 기반 구축

- 기능성 식품 등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기술기반 창업 촉진
 - 수출 전략품목 및 선진 포장·기자재 개발, 고부가 식품소재 및 상품화 가공적성 연구 등 **식품 R&D 확대**(‘13: 313억원 → ‘14: 376)
 - 유관기관, 지자체·민간 식품연구소 등과 정례적인 협의회 및 연구 결과 공유를 위한 **‘기술 실용화 네트워크’** 구축·운영(4월)
 - **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** 식품 R&D 기능 강화
 - 품질안전, 기능성평가, 패키징 센터 등 3대 분야 상품화 R&D를 전문화하고, 지역대학의 인력·연구시설 등 활용방안 모색(9월)
 - 농공상 연대 등 비농업 분야의 농업·농촌 투자 확대 유도
- 우수한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에 **우수기술 사업화자금 지원**(업체 당 최대 10억원 용자지원)
 - * 실용화·산업화를 위한 시제품 생산비 및 운영자금 등 지원
 - **농식품 R&D 펀드 조성**(‘14: 100억원)을 통해 **기술금융 활성화**
 - 운용사의 투자참여 유도를 위해 수익성 제고 장치 마련
 - * 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가 농식품 R&D 사업화 경영체에 투자를 할 경우, 수익 발생시 모태펀드(정부)에 배당될 수익금은 전액 운용사에 양도
 - **농림식품 신기술인증제도 본격 시행**(5월)을 통해 **민간 투자 촉진**
 - 인증기술에 대해 자금지원, 기술력 평가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
 - * 신기술인증제도 운영요령 제정(4월), 사업공고(5월), 확정(8월)
- R&D 기획 단계에서부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**연구목표 명확화 및 현장 적용시험 의무화**
 - 연구수행 기간 중, 농기업 및 농업현장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R&D 결과 평가시 농식품기업 및 농업인 참여 의무화

종자·종축산업 인프라 확충

- **신품종 개발·보급 등 가시적인 성과 도출 및 육종기반 확충**
 - **수출·수입대체 품종 개발**을 위한 **골든시드 프로젝트** 본격화
 - 31품종 해외 수출, 6품종 수입 대체 등 성과 가시화(‘14년, 384억원)
 - 육종연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**민간육종연구단지 착공**(6월, 김제)
 - 원자력기술 등 기초·원천 연구성과(미래부)와 실용·산업화 연구 성과(농식품부)를 연계한 **방사선육종연구 활성화**
 - * 농식품부-미래부 MOU 체결 추진(3월)
 - 특허, 종자 정보 등 생명자원 이용활성화를 위해 **통합 DB 구축**(12월)
 - * 생명자원 DB화 : (‘13) 147만점 → (‘14) 149
- **종자 수출 활성화** 지원을 위해 **종자산업진흥센터*** 지정(10월)
 - * 종자업체 수출 관련 정보제공,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컨설팅 등 지원
 - 국내 개발품종의 현지적응성 파악 및 홍보 강화 등을 위해 주요 수출대상국(중국, 인도, 인도네시아)에 **종자 전시포 운영**
- **종축 개량 효율성 제고방안 수립·추진**(한우 4월, 돼지 5월, 젓소 6월)
 - * (한우) 보증씨수소 선발 강화 : (‘13) 18두/년 → (‘14) 25 → (‘17) 30
 - * (돼지) 한국형 종돈 개발을 위해 국내 종돈장 간 네트워크 연결 확대: (‘13) 9개 종돈장(30%) → (‘14) 14 (45) → (‘17) 25 (80)
 - * (젓소) 고능력 수정란(200개)을 이용한 한국형 씨수소 선발 : (‘14) 2마리/년 → (‘17) 4
- 육묘 품질관리체계 구축(등록제 도입 등) 및 분쟁문제 해결 장치 마련 등을 포함한 **육묘관리 및 산업 육성 종합대책 마련**(10월)
 - 이해관계자 대상 공청회, 지역설명회,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(종자산업법 개정 등) 필요성에 대한 **공감대 형성** 추진

3. 개방화 대응 및 수출 확대

[지시사항]

< 목표 >

- ◆ 개방화 시대 대비, 농식품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신감 제고
- ◆ 수출 관련 정보 제공, 농가·기업 애로 해소 등으로 수출 확대

1 정책 핵심 내용

- 영연방 3개국 FTA, 한·중 FTA, 환태평양 동반자협정(TPP), '14년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
- 수출 유망 시장 육성과 신시장 개척으로 농식품·농기자재 수출을 확대하고, 수출 애로사항을 분석하여 민·관 공동으로 해결

2 그간의 성과

시장 개방화 총력 대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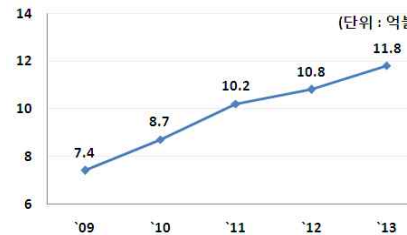
- 사회적으로 큰 갈등 유발 없이 한·중 FTA 등 주요 협상 마무리, 농업 보호에 역점을 두면서, 아태지역 경제통합 발판 마련에 기여
 - * 한·중FTA 1단계 협상 타결('13.9), TPP "관심표명" 발표('13.11), 한·호 FTA 실질타결('13.12)
- 한·미, 한·EU FTA에 대응하여 직접피해보전 및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대책 수립·추진('13년에 80개 사업, 3.5조원 투융자 지원)
 - 피해보전직불제 도입('04) 후, 한우·송아지(93천호, 902천마리)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 최초 지급
- FTA 확대 등에 맞춰 농어촌특별세 기한연장('14.6 → '24.6)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등 농업·농촌에 대한 안정적 투자자원 확보

- 지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의견 수렴, 전문가·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세부사항 준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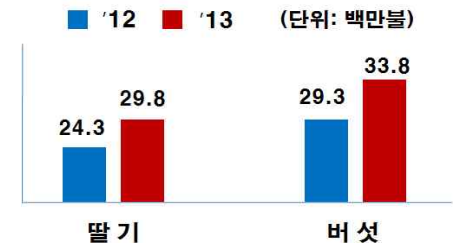
해외시장 개척

- 수출 유망국가별 맞춤형 홍보·마케팅 강화, 품질 향상, 검역협상 등을 통해 농식품 수출 확대('12: 56.4억불 → '13: 57.2)
 - 대규모 한국 농식품 박람회(K-food fair) 개최 등 현지 홍보 강화, 한류 확산 등으로 동남아 국가 등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
 - * K-Food Fair 개최지역별 수출 증가율('13) : 중국(9.1억불, 4.5%↑), 미국(5.2, 10.5↑), 홍콩(3.5, 28.7↑), 베트남(3.5, 24.6↑) 등
 - 물류비 절감, 품질 향상, 검역 협상 강화 등을 통해 농가소득과 밀접한 딸기, 버섯 등 신선농식품 수출 증가
 - 신선부류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물류효율화 및 해외 박람회 참가·마케팅 지원('13: 33개국, 280억원)
 - 농축산물 수출을 위한 검역 협상 강화(34개국, 72개 품목)
 - * 농산물 : 포도·파프리카(對중국), 밤·딸기(對호주) 등 18개국 44개 품목
 - * 축산물 : 삼계탕(對미국, 중국, EU), 열처리가금육(對일본) 등 16개국 28품목

< 신선 농산물 수출 현황 >



< 딸기·버섯 수출 현황 >



- 농기계 등 농업 전후방 산업 분야 수출 확대

* 농기계 수출 : ('11) 608백만불 → ('12) 746 → ('13) 835(12% 증)

수출기업 애로 지원

□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농식품 수출기업 지원 강화

- 관계부처 합동으로 '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방안'을 수립('13.9)하여 수출기업의 손톱 밑 가시 제거*
 - * 사례) 증명서 발급 미비로 중단되었던 베트남 영지버섯 수출 재개('13말)
- 연초 **엔화환율 급락**에 대응, 위기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 농식품 수출 **농가·업체 피해보전***(산업부 협업)
 - * '13년 긴급 수출 융자금 300억원 지원, 수출보험(환변동 보장 40여개 업체·수출대금 미회수 보장 300여개) 지원, 기타 해외 판촉 및 물류자금 지원 등
- 중국 구매사절단 초청 수출 상담회(산업부 협업), 재외공관에서의 농식품 홍보(외교부 협업) 등 추진
 - * (산업부 협업) 대중국 수출상담회 개최(2회), (외교부 협업) 27개국 43공관에서 농식품 수출 촉진 홍보 사업 추진

3 장애요인 및 개선할 점

- 금년에 한중 FTA,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등 통상 현안이 집중되면서 **농업분야 전면 개방**이라는 농업계 불안감 확대
 - 시장개방 확대 등에 따른 불안감 고조로 일부 농업단체·국회에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등 요구
 - FTA 피해보전제도 도입('04) 이후, 최초로 발동된 **피해보전직불제**는 수입기여도 적용에 대한 논란 발생
- 환율변동 등 위기 대응능력이 미흡하고 잠재시장 개척 노력 부족
 - * '13년초 급격한 엔화 환율저하로 피해 발생('12년 대비 8.6% 감소)
 - * 수출 상위 3개국(일본, 중국, 미국)이 43% 차지

□ 국내외 가격동향 등 외부환경에 따라 수출물량 변동폭이 커 안정적 수출물량 확보 곤란

* 주요품목별 생산 대비 수출 비중('12) : 파프리카 41%, 딸기 1.3, 토마토 0.9 등

□ 수출국 다변화로 국가별 통관제도, 비관세장벽 등 수출업계 애로 사항이 증가하고 있으며,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도 다양화

4 2014년 중점 추진계획

- ❖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 대응, 범정부적으로 신뢰·책임감 있는 대책 마련, **농업계 불안감 해소**
- ❖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수출 유망시장에 대한 선택과 집중도를 높이고 **고품질·안전 농식품 수출물량 확보**를 위한 기반정비 추진
- ❖ **수출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등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**하고, 시장개방은 **피해 최소화**와 동시에 **전략 기회로 활용**
 - * 농식품 수출 : ('13) 57.2억불 → ('14) 68 → ('17) 100

시장개방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

- 쟁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로 갈등을 최소화하고, 이해관계자·전문가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**쌀 관세화 여부 결정**
 - 지역별 토론회, 공청회, 전문가 토론회, 부처협의 등 **소통 강화**
 - 쌀 산업의 장기적 발전, 지속가능성 제고, 성장잠재력 확충방안 등을 포함한 **쌀 산업 발전대책** 마련
 - * 들녘경영체 육성, RPC 통합·연대, 수출 확대, 쌀 가공산업 등 소비촉진, 수입쌀 국산 둔갑 방지, R&D 강화(품질향상, 품종·신제품 개발 등)
- (FTA/TPP)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, 우리 농업의 체질 강화를 위한 **국내 보완대책 정비**

- (한·중 FTA) 협상과 대책 수립을 병행, 개방에 선제적으로 대응
 -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의 미비점 보완 등 제도개선
 - * 수입기여도 명문화 및 보전비율 조정 등
 - 기존 FTA대책의 체감도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(9월)
 - 발농업 경쟁력 제고*, 인력 양성, 안전성 강화, 수출 확대 등 전반적 체질개선 방안을 마련하고, 품목별 대책도 폭넓게 검토
 - * 발 기반정비 확대, 기계화율 제고, 재배방법 표준화, 주산단지 조성 등
- (영연방 3개국 FTA) 협상 타결 후 영향분석을 실시하고, 기존 FTA 대책 개선 및 친환경 축산업 발전대책* 수립
 - * 한우 등 생산비 절감, 산지축산·무항생제 인증 등 품질 고급화
- 사회적 갈등 최소화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및 홍보 강화 등 대국민 소통 강화
 - * 소통협력 전담인력을 배치, 농업인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주요 문제에 대한 논리개발 동향분석 등 대응, 이해관계자 협상 이해도 제고

수출시장 확대

- 기존 시장 중 수출확대가 기대되는 국가를 선택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신규수요를 창출하고 유망시장으로 육성
 - 대중국 수출 확대를 전인할 '제2 파프리카 품목' 발굴 및 지원
 - 딸기, 토마토 등 품목별 수출선도조직 육성(19개)
 - 발굴 품목 위주로 현장 실용화 R&D 강화
 - * 지원(안) : 14년(1개 품목) → 15년(2개 품목) → 16년(2개 품목)
 - 한류를 활용, 중화권·아세안 국가 대상으로 대규모 홍보 추진
 - 국가별·지역별 대규모 한국 농식품 박람회(K-Food Fair) 개최
 - * '14년 K-Food Fair : 중국(상해, 하얼빈, 우한, 청두), 홍콩, 베트남, 싱가포르
 - 한국 농식품 CF·다큐영상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·배포
 - * 중화권 CF 제작, 다큐 방영, 인터넷 포털 및 SNS 광고(Youtube, Weibo 등)

-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및 검역 협상 강화
 - 중남미·아프리카 등 신규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*·정보 지원
 - * 할랄시장 진입을 위한 인증비 지원, 주요 유통매장 연계 판촉 지원 등
 - 상대국 검역관 초청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한 검역협상 타결
 - (14: 6개국 9품목¹⁾), 축산물 수출재개 협의²⁾ 및 농산물 검역요건 완화³⁾
 - 1) 미국(삼계탕, 한라봉, 천혜향), 중국(파프리카, 유제품), 일본(열처리가금육), 멕시코(배), 필리핀(파프리카), 몽골(돼지고기)
 - 2) '14.5월 구제역 백신접종정국 지위 획득시 과거 수출국 대상 쇠고기·돼지고기 수출 협의
 - 3) 대만(사과·배 현지조사 축소(2회/년 → 1), 미국(수출배(Pear) 포장방법 개선)

안정적인 수출 인프라 구축

- 고품질·안전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수출하기 위한 생산기반 마련
 - 생산·수출자를 계열화한 수출 선도조직 육성('14년까지 19개)
 -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 수출물량 확보, 수출 브랜드·안전관리 지원, 기업 위기관리(환변동 보험, 단기수출보험 등) 지원
 - 생산자 연합 및 품목별 수출 브랜드* 육성 등 농협(중앙회, 단위조합, NH무역)의 역할 강화
 - * 수출연합조직 10개 육성, K시리즈 공동브랜드 8품목 육성
- 농식품 수출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수출역량 강화 지원
 -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집중
 - 중소기업의 자금지원비율과 배정한도 상향(80%/150억 → 90/200)
 - 자금 배정 최저 한도액(30백만원) 폐지로 영세 수출경영체 지원 확대
 - 공동물류, 수출전진기지(11월 완공) 활용 등으로 해외 경쟁력 강화
 - * 해외공동물류센터 확대(9개국 30개소 → 10/33), 공동물류노선 확대(20개 → 30)

- **한류 및 농업협력사업(ODA)**과 연계하여 농식품·농기자재 및 농업기술 수출 확대
 -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외 농기계·자재 박람회 개최 및 참가
 - * 2014 국제농기계·자재 박람회(KIEMSTA) 개최 : 10.29~11.1, 천안
 - * 중고농기계 수출 지원을 위한 **한국농기계글로벌센터 건립**(12월)

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협업체계 강화

- **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체감할 수 있는 수출 정책 수립**
 - 민관 합동으로 **문제 해결형 수출개척협의회 운영**(1월~, 분기별) 및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수출개척 TF 운영(2월~, 매월)
 - **수출 현장과의 소통 강화**로 애로사항의 적극적 발굴 및 해결
 - 수출기업 및 현장 애로사항 **발굴 전담 창구 상설 운영**(aT, 농협)
 - * 다양한 창구를 통해 애로사항을 수집·통합 관리하고 고질적인 문제 및 복수 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항은 수출개척 협의회 안건으로 활용
 - 지역별 수출농가·업계를 방문하여 현장 애로해소 및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항은 개척협의회 안건으로 발굴·추진
- aT·KOTRA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국가별 시장조사·분석을 확대(9개국 → 11)하여 수요자의 수준에 맞는 **맞춤형 정보 제공**
 - * (초기) 통관·무역 실무, 바이어 알선 등 기초 자료, (중견) 시장 현황 및 맞춤형 제품개발 등 고급 정보, (공통) 국가별 검역·위생기준, 수출 지원정책 등
- **수출현장의 수요에 부합된 정보** 위주로 조사하고, 수요자가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기능 개편
 - * 수출애로상담센터 도입(aT), 무역정보시스템(www.kati.net)에 필요정보를 알기 쉽고 찾기 쉽게 인포그래픽 등으로 제공

4. 농가 소득안정장치 강화 [국정과제 31-2, 31-3]

< 목 표 >

- ◆ 투입재 비용 상승, 급격한 농산물 가격하락 등에 의한 **농업경영 위험을 관리·완화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**

1 정책 핵심 내용

- **경영비 절감, 부가가치 창출, 가격하락 대비 경영안정장치 강화 등 농가 소득 안정 도모**
 - 원유, 농자재·농기계, 사료비 등 부담 가중 → **경영비 절감**
 - * 호당 농업경영비 : ('10) 17,123천원 → ('12) 18,461 (7.8% 상승)
 - 개방 확대 등으로 인한 농가소득(농업소득) 정체 문제 해소 및 도농간 소득격차 완화
 - * 농가소득(도시가구 대비) : ('00) 23백만원(80.5%) → ('10) 32(66.8) → ('12) 31(57.6)

2 그간의 성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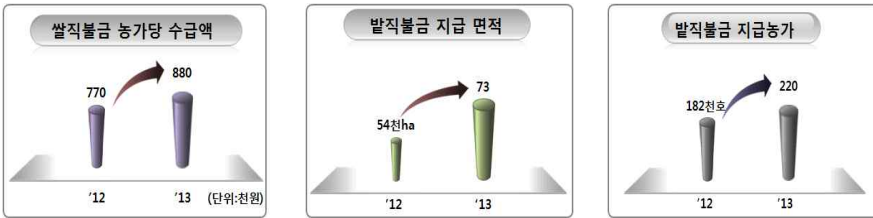
- **경영비 절감을 위해 에너지 효율화 시설 보급, 농기계 공동이용 및 조사료 생산확대 등 추진**
 - (**에너지**)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 시설 보급으로 난방 유류 사용 53천톤 감소, **농가당 63만원 수혜**
 - * 신재생에너지 / 에너지절감시설 : ('12) 0.7천ha / 4.3천ha → ('13) 1.0 / 5.0
 - (**농기계**) 농기계 임대사업 및 은행사업을 통한 **공동이용 확대**
 - * 농기계임대사업소 : ('10) 195개 → ('11) 220 → ('12) 250 → ('13) 293
 - * 논 농작업 대행면적 : ('11) 138천ha(벼 재배면적의 16%) → ('13) 210(25)

○ (사료비) 특별사료구매자금(1.5조원) 지원, 사료원료 할당관세 적용 확대, 조사료 재배면적 증가 등으로 **축산농가 경영비 절감**

- * 특별사료구매자금 1.5조원(1.5%) 지원으로 외상구매(15%) 대비 약 2천억원 부담 완화
- * 사료원료 할당관세(무관세) : ('12) 21개(16) → ('13.상) 22(17) → ('13.하) 22(22)
- * 조사료 재배면적/자금률 확대 : ('12) 27만ha/80% → ('13) 30 / 82

□ 주요 직불제 확충을 통해 **농가당 수급액 및 수혜대상 증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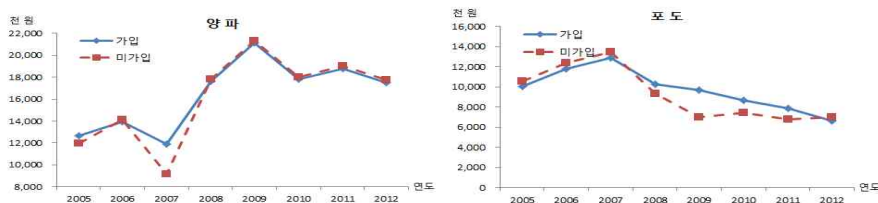
- **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**('12: 70만원/ha → '13: 80)으로 농가당 쌀 직불금 수급액 증가('12: 770천원/ha → '13: 880)
- **밭 직불제 대상품목 확대**('12: 19개 → '13: 26)로 수혜농가 증가



□ 가격하락 등 경영위험에 대비한 **수입보장보험 도입 준비**

- 보험 상품설계안 등을 포함한 **농업수입보장보험 추진계획 수립** ('13.3) 및 콩, 포도 등 6품목 대상 **도상연습 실시**
- 수입보장보험 가입시 **수입변동성 감소**(양파 21.6%, 포도 27%) 등 수입보장보험이 **수입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**

< 수입(가격)보험 가입에 따른 농가수입 추이(양파, 포도) >



3 장애요인 및 개선할 점

□ **농기계·자재, 유류·사료가격,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가 경영비 증대, 소규모 개별 농가단위 경영으로 비용절감 한계**

- * 1ha 미만 농가수는 404천호로 전체 농가의 55.8%('12)
- * 농자재비 : ('05) 7,637천원 → ('10) 9,627 → ('12)10,230('05 대비 34% 증)

○ **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은 초기 시설투자 부담으로 보급 미흡**

- * 지역의 경우 초기 투자규모가 커(14억원/ha) 보급에 애로

○ **축산농가 생산비 중 사료비 비중*이 높고 대부분이 수입곡물에 의존**

- * 번식우 45.4%, 비육우 41.7, 젖소 56.1, 비육돈 52.6% 등

○ **시중 금리 하락 추세에도 농업정책자금은 융자 3% 고정금리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농가의 상대적 금융 부담 가중**

- * 전체 농업정책자금('13년말, 24.3조원) 중 고정금리(3%) 자금이 58%(14조원)

□ **고품질·안전 농축산물 생산 및 판로 애로로 부가가치 창출 한계**

-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 미흡(식품기업 국산원료 이용율: 32.2%)으로 **식품산업 성장이 농산물 수요창출 및 농가소득 제고 한계**

□ **지속적인 직불제 확충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소득 안정 장치가 미흡하고, 직불금 부담 수령 문제 지속 제기**

- 쌀 직불제 기존농가(1천m² 이상)와 신규농가(1만m² 이상 2년 이상 경작) 지급요건 차이로 **형평성 문제 제기**

- 수입보장보험 도상연습 과정에서 객관적 가격정보 확보, 높은 손해평가비 등이 보완과제로 제기

- 부재지주의 직불금 수령 및 검증 체계 미흡 등으로 인한 직불금 지급 오류 발생

4 2014년 중점 추진계획

❖ 농업인 상호간의 협업추진과 투입재 비용 절감을 통해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, 소득안전망 확충

* 순직불제 예산 확충 : ('13) 1.1조원 → ('14) 1.3 → ('17) 1.6

협동 경영 촉진

- 농기계 임대 및 은행사업을 통해 농기계 공동이용 확대
 - 발농업 농기계 임대사업소 42개소(마늘·고추·양파 전용 3개소 등) 추가
 - 농기계은행을 통한 논 농작업 대행면적 확대('13: 21만ha → '14: 23) 및 농작업 대행 직영농협 확대('13: 48개소 → '14: 70)
- 공동영농·규모화 등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50ha이상 집단화된 들녘을 공동 생산·관리하는 들녘경영체 59개소 추가 육성
 - * 들녘별경영체 : ('09~'13) 215개소 → ('14) 274(누계)
 - 들녘경영체 조직력 강화 등을 위한 교육·컨설팅 지원 확대
 - 광역방제기·공동육묘장 등 공동 농작업 등에 필요한 시설·장비 지원
 - * 교육·컨설팅/시설·장비 : ('13) 52개소/7개소(10억원) → ('14) 59/20(25억원)

경영비 절감 지원

- 농자재 유통단계 축소(4~5단계 → 3~4단계)를 위해 권역별 농자재 유통센터(3개소) 부지매입, 설립 인허가 및 건축설계 추진
 - * 농자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농협자재센터 확대(100개소 → 130)
- 사료가격 투명성 제고 및 조사료 생산·유통 활성화
 - 제품별 kg당 공장도가격 및 영양성분, 축종별·단계별 표준사료 성분 등 비교표 공개(10월)

- 경종농가의 조사료 재배·수확·판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축협에 조사료 작업단 80개소 추가 설치('13: 15개소 → '14: 95)
- 지자체별 자급률 및 재배면적 목표를 부여하고 추진실적에 따라 자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관리 강화

농업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정책사업 금리 인하(1월)

- 정책사업 금리인하*로 해당농가당 연평균 96만원 이자비용 절감
 - * 농지규모화 사업(2% → 1), 후계농육성(3% → 2), 우수후계농 추가지원(3% → 1), 농촌주택개량사업(3% → 2.7, 65세 이상은 2%)
- 농업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부 사업(운전자금 등 1.2조원) 변동금리(시장금리 연동) 시범도입(3월)

시설원에 에너지 절감 시설지원 및 기술 개발로 난방비 부담 완화

- 온실 신축시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시설(415억원, 133ha)을 연계하고, 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시설(372억원, 1,112ha) 보급 확대
 - * 신재생·에너지절감시설 보급 : ('13) 6,029ha → ('14) 7,274 → ('17) 12,425

고품질 농식품 안정적 수요처 확보

- 고품질·친환경 농산물 생산·가공·유통으로 부가가치 확대
- 농협 계통출하 확대, 식품기업과 농가간 상생협력모델(행복사다리) 확산(CJ, SPC 등 7개사) 등을 통해 계약재배 확산
 - * 영천 미니사과 사례 : 파riba케트와 MOU 체결 이후(사과요거트케일 등) 매출액·인지도 100%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
- 정부-지자체-연구기관-식품기업 협의체 운영(분기 1회), 성공사례 확산
 - * 설갱벼 사례 : 진흥청(주정용 품종개발) → 국순당 + 진흥청 상품화 공동연구 → 7개 제품개발 및 전량 계약재배(267농가 343ha, 순매출 27억원)

직불제 확대 및 관리 강화

□ 쌀 고정직불금 인상('13: 80만원/ha → '14: 90)

- 농가당 수급액 증가('13: 880천원 → '14: 990)로 **농가 소득안정 효과** 제고



□ 귀농인, 후계농 등 신규농 경영안정을 위해 쌀 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**완화 검토**(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, 12월)

- * 기존 수령자(1천m² 이상)와 신규농(1만m² 이상 2년 이상 경작)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급요건 완화 필요

□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('15년 시행)에 따라 **생산 중립형 쌀 고정직불제** 도입 준비

- *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(12월)

□ 농지이용 효율화 및 소득원 개발 등을 위해 겨울철 논에 사료·식량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**이모작직불금**(40만원/ha) 신규 지급

- * 곡물 자급률 제고 및 규모화 추세를 감안, 이모작직불금 지급 상한 조정
- * 사례 : 가평 찰옥수수 이모작(7·10월 수확)으로 농가소득 30% 증가

□ 직불금 부당신청 및 수령 방지를 위해 쌀·밭·조건불리직불 사업의 지역간 **교차점검 정례화**(반기별 1회)

- * '13년 지역별 교차점검 실적 : 지급제한 및 회수 82건, 시정 688건

○ 직불금 집행·관리체계를 **농업경영체 D/B 기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일원화**

- * '14.2월부터 농업인 편의성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업경영체등록 및 쌀·밭·조건불리 직불제 일괄신청(지자체·농관원택일)

□ 객관적 가격 산출, 손해평가 간소화 등 **수입보장보험** 도입을 위한 **도상연습 지속 추진**

- 도상연습 추진계획(3월) 및 시범사업('15년) 추진계획 수립(9월)
- * 도상연습 : ('13년) 6품목(1,000농가) → ('14년) 11품목(1,500농가)

5. 농업재해 대응력 강화

[국정과제 31-1]

< 목 표 >

- ◆ 자연재해와 가축질병에 대한 **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** 구축을 통해 농업인이 **안전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**

1 정책 핵심 내용

□ **안정적 영농**을 위해서는 **자연재해 및 가축질병 사전예방과 재해발생시 신속한 지원**을 위한 **대응체계 구축이 필요**

- (사전예방) 용수·배수시설 등 농업인프라 확충, 노후 농업기반시설 보수·보강 등으로 가뭄·홍수 등에 대한 **사전 대응력 강화**
- (기상정보) 기상재해 대응을 위한 농업기상관측망 확대 및 재해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 **농업 기상정보의 고도화 및 서비스 개선**
- (재해보험) 다양한 상품개발 및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**가입률을 제고**하고, 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**기반 확충**
- (재해지원) 재해발생시 **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 지원**을 위한 안행부, 지자체 등 **관계부처간 유기적 협업 강화**
- (가축질병) 상시 방역·검역을 통해 **질병 발생을 사전예방**하고,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**초동대응태세**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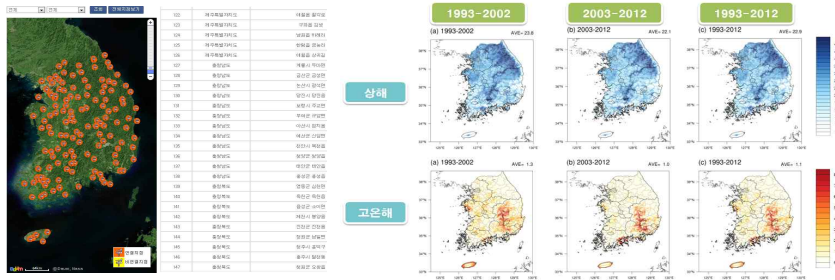
2 그간의 성과

□ 용수개발 등 생산기반 인프라 확충으로 **일시적인 가뭄·침수** 등에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기반 구축

- * 수리안전답률('12) : 59.3%(전체 논 면적 966천ha 중 573천ha)
- * 배수 개선율('13) : 53.1%(상습침수지역 303천ha 중 161천ha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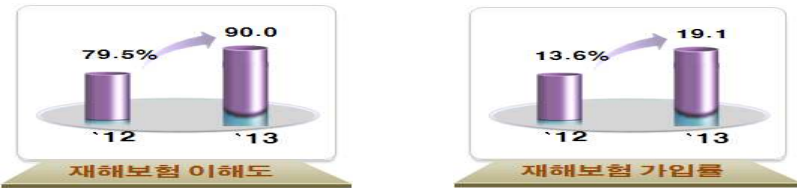
□ 전국단위 농업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농작물 기상정보를 실시간 웹서비스로 제공하고, 온도 관련 기상재해위험지도 작성

* 농업기상관측망 연계 147개소 및 농업기상재해 발생 예측 위험지도 작성 (동해, 상해, 냉해, 고온해)



<농업기상관측망 연계지점, 147개소> <온도관련 기상학적 재해 위험분포도(상해, 고온해)>

□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(51개 →56), 전문 손해평가 인력 양성 (426명), 종합위험방식 전환(배 시범사업) 등 경영안정장치 강화



□ 불가항력적인 정전 2차 피해 지원, 재난복구비 인상 등 재해지원 현실화로 농업인의 자연재해 대응 체감도 향상

* 자연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 : ('12) 실거래가의 55% → ('13) 58%
* 농작물·가축 폐기비 지원 신설 : 농작물 75천원/톤, 가축 26원~31천원/마리



□ '10~'11년 대규모 구제역 발생 등을 계기로 가축질병 방역체계 전면 개편(구제역은 '11.4월 이후 비 발생 유지)

- 일제 소독(매주 수요일) 및 해외여행객 관리 등 방역·검역 강화
- 신속한 초동대응 등을 위해 축산차량등록제(GPS 차량관리) 시행 ('13.1) 및 동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(KAHIS) 구축



3 장애요인 및 개선할 점

□ 지속적인 생산기반 정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빈도·강도 증가로 가뭄·홍수 피해 발생 가능성 상존

○ 전체 논(966천ha) 중 수리시설이 없는 천수답이 19.4%(188천ha), 수리안전답은 59.3%(573천ha)에 불과하여 가뭄에 취약

○ 상습 침수지역(303천ha) 중 배수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142천ha는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가능성 상존

* 최근 5개년('06~'10)간 농경지 침수피해 52천ha발생(중앙재해대책본부)
* 20년 빈도 강수량 : ('83) 276.7mm → (현재) 356.6mm(29% 증가)

○ 농업 생산기반시설 노후화 및 태풍·폭우·폭설 등 대형 자연재해 빈발로 농가의 경영위험 상승

* 30년 이상 저수지('12) : 95.2%, 대형 기상이변('01~'08) : 연평균 24.5회

□ 이상기상에 대한 선제적 예방기반이 부족하고, 농업재해 피해 저감을 위한 농업기상 예측정보 서비스 체계 구축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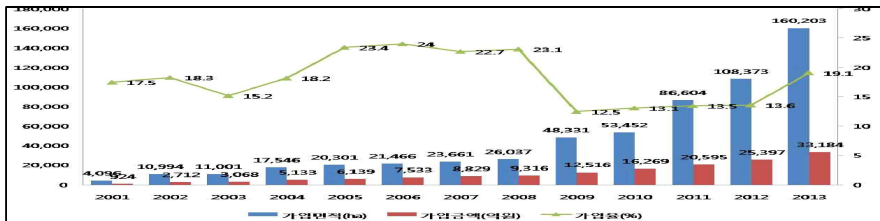
□ **가축재해보험금 관련 부정수급 사건이 발생('13.11월)하는 등 보험금 심사에 대한 관리·감독 개선 필요**

* 지역축협·축산농가·운반상·수의사 등이 공모하여 가축피해를 허위신고, 지난 3년간 64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부정수급

○ **재해보험 가입률이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 낮은 수준이며, 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전담기관 부재**

* 감귤·고구마·마늘·옥수수 재해보험 가입률은 0.2~0.7%에 불과

〈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〉



□ **철새 등 위험요인에 적합한 대응책 미흡, 지역 및 축산농가 방역의식 및 방역체계 미흡, 축사시설 낙후 및 밀집사육으로 방역효과 한계**

* '03년 최초발생 이후 2~3년마다 AI 재발, '14.1.16일 이후 총 23건 발생
* 재발 시·군(5회 중 2회 이상 발생 시·군): 19개, 재발 농장: 금번 23건 중 3건

4 2014년 중점 추진계획

❖ **가뭄·풍수해 등 자연재해 대응한 항구적인 안전영농기반 구축 및 수리시설물 안전관리 강화**

* 수리안전담물/배수개선율: ('13) 59.3% / 53.1% → ('14) 60.3 / 54.8 → ('17) 62.0 / 59.8

❖ **다양한 상품개발 및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가입률을 제고하고, 보험사업 인프라 강화로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**

*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: ('13) 56 → ('14) 59 → ('17) 69

❖ **AI 종식에 총력 대응하고, AI 발생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가축방역시스템 재점검하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**

안전영농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

□ **강수량·저수율 모니터링 강화 및 급수능력 분석을 통해 봄 영농기 가뭄에 대비한 선제적 안전영농 급수 대책 마련·추진(2~5월)**

○ 수리시설 및 양수장비 점검 정비, 대체 수원 확보, 저수지·용수로 물가두기, 공사중인 사업장 조기 완공·가동 등 추진

* '13년 평균강수량(1,163mm, 평년의 89%), 2월 저수율(전국 72%, 전남·북 63%, 경남 60%)

□ **가뭄·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**

○ 가뭄상습지역 및 용수부족지역에 저수지, 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농촌용수공급기반 구축(2,600억원)

-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80개 지구 36천ha 추진, 6.8천ha(준공 1.6천ha, 부분준공 5.2천ha)에 용수공급

- 기후변화 영향을 감안한 용수 수요·공급에 대한 조사·분석을 기반으로 「중장기 농촌용수이용 합리화계획」 수립(12월)

○ 상습 침수피해 농경지에 배수시설(배수장, 배수로 등) 확충(2,900억원)

- 배수개선사업 101개 지구(21천ha) 추진, 21개 지구(5.1천ha) 완료

□ **노후 수리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점검 및 보수·보강 강화**

○ 노후 저수지(301개소), 용배수로(271개 지구), 방조제(110개 지구) 등 수리시설 682개소 적기 보수·보강으로 안전성 확보

○ 해빙기, 태풍, 홍수 대비 수리시설 일제 점검 및 정비(2~6월) 및 집중호우 대비 저수지·배수장 비상대처훈련 실시(5월)

□ **최근 적설량·풍속 등 기상변화를 반영하여 내재해형 온실 규격을 보완*하고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온실 설계도 개발(108종 → 133)**

* 30년 빈도 기준을 적용하여 2007년에 작성한 내재해형 온실규격 보완

농업기상재해 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

□ 농업기상관측망을 확대하여 농작물 주산지 단위로 상세한 농업기상 정보 제공

- 농업기상관측 확대 : ('14) 160개소 → ('17) 200
- 농업기상정보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측정보를 예방정보로 고도화
 - * 1차(기온 등 관측정보) → 2차(가뭄지수 등 가공정보) → 3차(재해위험지도 등 공간정보) → 4차(조기경보 등 시간정보)

□ 농업기상재해 발생 예측 위험지도 작성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

- 농업기상재해 위험지도 : 가뭄, 폭우 등 4종
 - * ('13) 동해, 상해, 냉해, 고온해 4종 → ('14) 가뭄, 폭우, 폭설, 우박 4종 → ('15) 태풍, 조풍, 돌풍, 일조부족 4종
- 농업기상재해 발생 조기경보서비스 체계 구축('13~'17)
 - * 온도, 강수, 바람, 일조관련 12종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

농업재해보험 내실화

□ 가축재해보험사고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방안 추진

- 소 재해보험 실태 특별점검 실시('13.9월 기준 27만두 가입) 및 정기점검 강화
 - * 농식품부(보험팀, 축산국), 보험사, 손사법인, 수의사회 등 공동 점검 및 보험사별 보험사기 특별전담반(SIU) 인력 확대
- 소 손해평가 체계 개편(지역조합 → 보험사) 및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
 - * 지역조합에 일임되어 있는 소 손해평가를 보험사 주관으로 전문평가인이 담당토록 개선
 - * 보험금 지급서류에 도축확인증명서 및 사고 소 전신촬영사진 제출 의무화, 도축이력·생산이력 사전 조회, 연고 수의사 심사배제 등 지급심사 강화

- 보험사기에 가담한 계약자(가입제한), 대리점(계약취소, 수수료 감액), 수의사(면허정지) 등 제재 강화

□ 다양한 상품개발 및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가입률 제고

- 많은 농업인이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종합위험보장 시범사업(배 12곳, 단감 3곳) 추진



□ 미래부·농진청 등과 협업하여 무인항공기 등 첨단 ICT·장비를 활용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손해평가기법 개발 추진(9월)

- * 개발계획 수립(2월), 과제 입찰공고(미래부 협업, 6월), 연구기관 선정(미래부 협업, 7월), 연구개발(농기평 관리기관, 9월~)
- 피해농가의 신속한 보험금 지급 및 손해평가의 신뢰 제고

□ 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재해보험 인프라 확충

- 재해보험사업의 통계관리, 인력양성, 농가교육 등 공적 역할을 담당할 농업정책보험공단 설립(12월)으로 관리·감독 기반 마련
- 신속한 피해조사를 위해 전문손해평가인력 추가 양성(200명, 6월)



농업재해지원 현실화

- 재해발생시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 지원을 위한 안행부, 지자체 등 관계부처간 유기적 협업 체계 구축
 - 안행부(특별재난지역선포, 특별교부세 교부 등), 지자체(신속한 피해조사)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피해 지원
 - 피해복구비는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 복구비 등 직접지원과 더불어 학자금 지원,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 간접지원도 병행
- 폭염·폭우·폭설 등에 대비하여 재해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 재해대책 마련·추진(6·10월)
 - * 시·군별 지역 담당관제 운영, 재해 사전예방·복구상황 등 현장 소통창구 담당

AI 조기종식 및 방역체계 개선

- AI 종식을 위하여 범정부(안행부·환경부·식약처·지자체 및 군·경 등 협력) 원스톱 위기대응체계 구축하여 비상방역체제 가동
 - ICT를 활용(KAHIS, GPS 차량관리)한 방역으로 효과 극대화,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대 설정, 이동통제초소 등 차단방역 철저
 - 살처분 조치는 반경 500m를 원칙으로 필요시 3km로 확대(지자체 등 의견수렴) 적용, 향후 전문가실사단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신중히 결정
 - * 살처분 현황(2.22일) : 257농가, 534만 4천마리
 - * 살처분농가 AI 검사결과 257농가 중 112농가가 양성(43.6%)이며, 3km이내 예방적 살처분농가는 186농가 중 74농가가 양성(39.8%)
 - 발생농장 관련 역학 농가·시설(2.22일, 3,977개)을 신속히 추적(2~3일 → 4시간) 하여 긴급 이동제한 및 예찰 강화
 -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(2회)*하여 소독을 강화하고, 철새도래지 주변 농가에 대하여 '철새경보시스템**'을 운영하는 등 선제적 방역조치

* 1차(1.19~20, 48시간) : 전남·북, 광주, 2차(1.27, 12시간) : 경기, 충남·북, 세종, 대전
 * 철새 분포현황 파악(환경부) → 경보 발령(농식품부) → 농가에 방역경보 SMS 전파(지자체·농협·방역본부) →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(농가)

- 검역인력(35명/일 → 64) 및 해외여행객 휴대품 검사(1편/일 → 39편/일) 확대 등 국경검역 강화
 - 발생 및 방역대책 상황 등에 대한 대국민 소통 강화(1일 1~2회 브리핑, 보도자료 배포 등)로 불필요한 오해 불식
- AI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('14년 상반기)
 - (철새 대응체계 구축) AI 위험지구(철새 도래지, 과거 발생지) 축사 시설 신규허가 제한 및 기존농장 이주시 인센티브 지원
 - *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및 AI 전담 대응조직(AI센터) 신설
 - (농가·지역별 방역체계 강화) 빈발농장 대해서는 살처분보상금 삼진아웃제*를 도입하고,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
 - * 예 : 1차 발생시 20% 삭감, 2차시 50%, 3차시 80% 삭감
 - 계열화사업자의 소속농가 방역실태 정기점검 및 보고의무제* 도입
 - * 계열화사업자가 소속농가 방역실태 정기 점검, 방역당국에 의무 보고
 - 지자체 방역 지원 확대 및 AI 검사기능 단계적 지방 이양 등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 강화
 - 가금을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단지에 대한 특별 방역 관리(분뇨, 사료에 대한 관리, 소독약 공급, 매몰지 확보 등)
 - (사육환경 개선) 전국의 축사시설을 일제 점검하고, 축사시설현대화 자금('14 : 3,817억원)을 「가금농장 리모델링 플랜」에 집중 투자
 - 축산업 허가제(적정 사육밀도, 소독·방역시설 구비 등) 관리 강화 및 친환경축산·동물복지 정책 등 축산업 체질 강화
 - 구제역 및 BSE에 대해서는 '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' 및 'BSE 위험무시국' 지위 획득 추진('14.5월, 세계동물보건기구)

6. 생활체감형 농촌 복지서비스 향상 (국정과제 52-1)

< 목 표 >

◆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 및 농촌 주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

1 정책 핵심 내용

- 농촌 주민 누구나 기본 생활을 영위하고 안정적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, 사회안전망 내실화 및 체감형 복지서비스 확대
 - 국민연금 지원, 농지연금 지급 등 농촌에 특화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노후소득 불안 해소
 - 농촌 특성을 고려한 복지전달체계 개선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
 -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 취약 계층의 주거 및 생활안정 도모

2 그간의 성과

취약계층에 대한 주거·의료·교육 지원 확대

- 지역개발 정책을 생활체감형으로 전환해 주민 주도형 마을발전 지원 체계 마련
 - 농촌의 주거환경과 고령화에 대응한 신규 사업모델 발굴
 - *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('13년) : 4개소(42억원)
- 농촌 취약계층의 수요를 반영한 복지 지원 지속 확대

- (교육)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
 - * 지원 대상(융자 지원액) : ('12) 34천명 (925억원) → ('13) 40천명(1,021억원)
- (의료)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질환 연구 및 예방교육을 위한 안전보건센터 5개소 확충
- (가사) 기초생활수급자, 조손가구 등 농촌 취약계층 및 경로당에 대한 가사도우미 10천가구 지원

사회안전망 구축

-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및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업인 대상 보험료 신규 지원 등 농업인 사회보험 지원 강화
 - * 지원 인원(금액) : ('12) 266천명 (1,077억원) → ('13) 285천명(1,192억원)
 - * 여성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: ('12) 85,635명 → ('13) 126,862(48% ↑)
-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등을 위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 도입('11), 13년 현재 2,927호 가입
 - 담보농지 평가방법 변경(공시지가 →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선택) 및 가입비(농지가격의 2%) 폐지 등 제도개선('13.12)
 - * 농지연금 월 지급액(농지가격 1.8억원, 74세 기준) : 810천원 → 924(14% ↑)
- 농작업·농기계 안전사고에 대한 유족위로금 인상(8천만원→9)
 - * '13년에 농작업 안전사고 농가(54,315건)에 보험금 516억원,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기계 손해 및 대인·대물 피해농가(3,800건)에 134억원 지급
- 고용주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 강화 등으로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(40개 시·군 시범사업) 가입실적 '12년 대비 6배 증가
 - * 가입추이 : ('11) 190건 → ('12) 338 → ('13) 2,006(매년 평균 380% ↑)

3 장애요인 및 개선할 점

-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차별화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가입률 등 소득안전장치 작동이 미흡
 -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여성농업인까지 확대하고 기준소득 금액을 상향하고 있지만,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상황
 - * 농업인 국민연금 가입·수급률(가구 기준) : 62%(‘13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)
 - 농지연금의 제한적 가입 요건(부부 모두 65세 이상, 영농경력 5년 이상, 농지 소유규모 3ha 이하) 등으로 농지연금 활성화 미흡
 - * 신규가입 농가 : (‘11) 911호 → (‘12) 1,291 → (‘13) 725
 - 농업인안전보험의 사망시 유족급여 등 보장수준·범위 등이 산재보험에 비해 낮은 수준
 - * 농업 분야 산재보험 사고발생률(‘12) : 1.3% (전체 평균 0.59%)
-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, 적은 인구, 자원 부족 등으로 농촌지역의 복지서비스 공급 및 접근성 취약
 - * 인구밀도(명/km²) : 농어촌(군) 100명, 중소도시 930명, 대도시 10,840명
 -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직접 서비스 제공 기능을 보완하는 정책 필요
- 농촌지역은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및 1인 가구가 지속 증가
 - * 농촌 65세 이상 독거가구 : (‘00) 28만호(9.2%) → (‘10) 44(13.3, 전체 6.1)
 - 주택 노후화, 비용 부담으로 인한 겨울철 난방 미실시 등 농촌 지역 노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이 점차 취약해지는 상황
 - 외로움이나 응급상황 대처 등을 위해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하나 농촌에 특화된 정책 미흡
 - * 공동생활가정 거주 노인의 88%가 공동생활에 만족(‘13, 이화여대 조사)

4 2014년 중점 추진계획

- ❖ 농촌에서 누구나 복지 서비스를 쉽게 접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확산에 주력하고, 농촌 특성을 반영한 정책 지원 집중

농업인 노후생활 보장 강화

-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% 노인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(복지부)
 - * 농촌 고령층의 낮은 소득 수준(‘12년 郡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: 81%)을 감안 시, 농촌지역에 더 큰 혜택 기대
- 농지연금이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장치로 정착되도록 지원대상 확대 등 활성화 방안 마련
 - 농지연금 가입연령 조건*을 완화해 다문화가정 등 부부간 나이 차이가 큰 경우도 가입 대상에 포함(4월)
 - * (현행) 부부 모두 65세 이상 → (개선) 농지소유자만 65세 이상
 - 정책 수요자(65세 이상 농지 소유자) 대상 설문조사 실시(3월)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,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* 마련(12월)
 - * 영농경력 등 가입 요건 완화, 담보 대상 농지 확대 등
 - 가입률 제고를 위한 현황 점검(매월) 및 도시 자녀 대상 홍보 강화
-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등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및 농업인 대상 홍보 강화로 국민연금 가입을 제고
 -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상향(‘13: 79만원 → ‘14: 85)
 - * 보험료 지원금액 : (‘13) 최대 35,550원/월 → (‘14) 최대 38,250원/월

□ **농작업 안전사고 대비 농가의 실질적 생활 안정장치로서의 농업인 안전보험의 법적근거 마련 및 보장수준 향상**

- 농작업 근로자 보장보험 전국 확대(2월) 및 **농어업인안전보험법제정**(9월)
 - * 간병·직업재활급여금 지급 등 보장 범위 확대, 안전재해 인정기준 설정 등
- **신속한 지급심사, 가입방식 다양화**(농업인을 피보험자로 도시거주 자녀 가입 등)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해 **보험사 참여 확대 유도**
 - * 민간보험사 대상 사업 설명회 개최(10월)

농촌형 복지전달체계 강화

□ **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**

- 읍·면사무소 **복지기능 보장** 및 군청 희망복지지원단 **권역센터 설치 시범사업** 추진('14: 4개소, 복지부)
- 지역농협을 활용한 농촌 **복지서비스 전달 기능 강화**
 - 노인복지, 공동아이돌봄센터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**행복나눔센터** 확충('14: 25개소)
 - 의료봉사, 문화공연 등 다양한 문화·복지서비스를 윈스톱으로 제공하는 **농업인 행복버스** 운영('14: 50회)
 - 고령농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안내 및 홍보 강화
 - * 문화·여행·스포츠이용권을 통합한 '문화누리카드(문체부)' 발굴·신청을 위한 홍보 및 안내 추진(2월)

□ **생활 체감형 복지서비스를 주민 주도로 공급하는 사회서비스형 농촌공동체회사 확산 기반 마련**

- **사회서비스형 농촌공동체회사 신규 발굴 및 지원 확대**('14년 13개소)
 - * 사업 지침을 개정(1월)하고, 지원대상 선정(3월) 및 자금 지원(4월~)

□ **읍·면 중심지를 주변마을에 대한 교육·문화·복지 등 기초 서비스 전달의 거점으로 육성**

- **중심지 선도지구를 선정**(9월, 15개), 복합서비스센터 등 지자체와 공동으로 사업모델 발굴
- 지역주민 중심의 **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시범사업**('14년 신규, 10억원)으로 오지·벽지 등 **주변마을과 중심지간 접근성 개선**
 - * 사업시행지침 마련(2월), 우수모델 발굴 및 사례집 제작·배포(11월)
 - **농촌형 대체교통 서비스 도입**을 위해 관련 규정정비(국토부)
 - *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및 사업 표준조례안 마련·확산(7월)

농촌 어르신 대상 복지서비스 확대

□ **공동이용시설 시범 조성을 통해 창의적 모델 발굴·확산**

- 기존 공공유희시설(마을회관, 체험시설, 복지관 등) **리모델링** 등을 통해 공동생활홈 등 고령자 **공동이용시설 시범 조성**(76개소)
- 관련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(1월)하여 **공동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복지·의료·문화 서비스를 패키지**로 제공, **체감도 극대화**
 - * 복지부(방문건강관리서비스 등), 문화부(어르신 문화프로그램·체육활동 등)

□ **취약계층의 영농활동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영농·가사도우미 지원 확대**('13: 25천가구 → '14: 26)

- 질병·사고 농가에 대한 **영농도우미 지원 확대**(15천가구 → 16)
- **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원을 확대**('13: 1,400개소 → '14: 1,600)하고, 지원 대상에 **65세 이상 1인가구 추가**(2월)

□ **건강관리 프로그램, 노년 교육활동 등 농촌 어르신 여가와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농촌건강장수마을 확대**('13: 658개소 → '14: 738)

7. 안전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(국정과제 12-3, 77-4)

< 목 표 >

- ◆ 모든 국민이 언제나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고품질·안전 농림축산식품 생산·공급·유통체계 구축

1 정책 핵심 내용

-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식량 자급능력 제고 및 해외 현지 곡물 유통망 확충 등을 통해 원활한 해외 식량공급체계 구축
 - 농지 이용률 향상, 산지이용 촉진, 우량농지 보전, 생산기반 정비 등
- 친환경농축산물 신뢰 제고 및 지속가능한 생산·유통·소비 채널 확대
 -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강화, 신규 수요처 확대 및 생산자 교육 강화
 -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사육기반 조성, 가축분뇨·약취 등의 체계적 관리 및 친환경축산물 공급·유통채널 활성화 추진
- 농산물 우수관리(GAP), 축산물 HACCP 확대, 학교급식 등 취약분야 안전성조사 강화 등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강화
- 소비자 참여형 종합정보망 운영, 포장 농산물 정보표시 강화 등 소비자 알권리 확대 및 바른 식생활 교육·홍보 강화

2 그간의 성과

식량 자급 능력 제고

- '94년부터 30ha 이상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업용수 개발, 농로 정비, 구획 정리 등 밭 기반정비 추진

- '12년부터 밭농업직불제를 도입하여 밭작물 생산기반 강화
 - * '13년 기준 보리, 밀, 콩 등 26개 품목에 40만원/ha 지급

- 우량농지의 농지전용을 최소화하고 유휴농지 복원기반 마련

- * 전체 농지 면적 : ('92) 2,070천ha → ('12) 1,730천ha(△16.4%)
- *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면적 : ('92) 867천ha → ('12) 809천ha(△6.7%)

- 농지전용 심사기준 마련('13.9)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조정('13.12)

- * (감면제외)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, KT 전기통신설비, 수산물 유통시설
- * (비율축소) 농업기계 시험·연구시설, 사업용 및 도시철도 간접시설 등

- 농업진흥지역 논·밭 고정직불금 우대 확대(13.9% 인상)

- * ha당 고정직불금(진흥/비진흥) : ('06~'12) 746천원/597 → ('13) 850천원/680

친환경농축산물 기반 조성

- 정부·지자체의 친환경농업 확산 노력, 소비자의 관심 증가 등으로 단지·지구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

- * 친환경농업 광역단지/ 지구 : ('12) 63천ha / 262천ha → ('13) 71 / 380
- * 친환경농산물시장(무농약 이상) : ('11) 1.9조원 → ('12) 2.1 → ('13) 2.4

- 축산으로 인한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뇨 자원화 기반 등 구축

- * 분뇨공동자원화/에너지화시설 : ('12) 85개소/6개소 → ('13) 98/8

원산지 등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

- 원산지 표시 확대로 소비자 알권리 강화 및 공정거래 확립

-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을 쇠고기 등 12개 품목에서 16개로 확대('13)

- * 4개품목(양고기, 고등어, 명태, 갈치) 신규 추가 및 배달용 돼지고기(족발, 보쌈 등), 배추김치의 고춧가루도 대상에 포함

-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커피 가공품 등의 원산지표시 확대('13)

3 장애요인 및 개선할 점

- 인구와 소득 증가로 식량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, 농지면적과 경지이용율은 감소하여 식량자급률 지속 하락
 - * 식량자급률 : ('05) 54% → ('12) 45.3%
- 쌀 위주의 생산기반 확충으로 밀, 콩 등 여타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의 생산기반 미흡
 - * 품목별 자급률(12년, %) : 밀(1.6), 콩(30.7), 조사료(80.2)
- 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을 통한 해외 현지 곡물유통망 확보는 대규모 자본 수반, 성과도출에 장기간 소요 등 애로
 - * 일본도 젠노(일본농협중앙회) 주도의 곡물유통사업 정착에 30여년 소요
- 국제 곡물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증가, 메이저 곡물업체의 과점 등 외생변수 통제가 어려움
- 친환경농축산물에 대한 신뢰저하 및 유통·판매 채널 미비, 지속실천에 대한 유인 부족 등으로 확산에 애로
 - 민간인증기관의 부실인증으로 인한 소비자 신뢰 저하,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시 생산비 증가, 생산량 감소 등이 확산을 제약
 - * 민간인증기관 행정처분(건수) : ('10) 5 → ('11) 10 → ('12) 14 → ('13) 14
 - 경제·수익성 중심의 축산물 생산구조와 분노 및 악취 관리 부족으로 인한 환경 부담은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
- 농가 참여 및 실천역량 저조, 수요 미흡 등으로 인해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기술인 GAP·HACCP 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
 - * GAP 재배면적 비중 : '11) 2.8% → '12) 3.4% → '13) 3.4%
 - * HACCP 지정 비중(전업농 기준) : '11) 15% → '12) 21% → '13) 28%
- 원산지표시 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가격차로 품목의 둔갑 판매 지속 발생(표시 위반 : '13년 4,443개소, 1.5%수준)
 -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표시정보 및 정책참여 기능 강화 필요

4 2014년 중점 추진계획

- ❖ 우량농지 보전, 생산기반 정비 등을 통해 식량자급 능력 제고
- ❖ 생산부터 소비 전 과정에 걸쳐 고품질·안전관리 기반 구축
 - * 친환경·GAP농산물 재배면적 비중 : ('12) 7.3·3.4% → ('14) 10·5 → ('17) 15·30
 - *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율 : ('13) 12% → ('14) 13 → ('17) 17

농업 생산기반 확충

- 식량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농지 보전 강화
 - 우량농지 전용 억제를 위하여 농지보전 부담금 제도 개선
 - * 농지보전 부담금 선납제 또는 증가산금제 도입(12월)
 - 쌀 고정직불금 농업진흥지역 우대 확대(20% → 25%)
- 유희농지 유형별 관리 등을 통해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
 - (즉시 이용 가능 농지) 농지은행, 귀농·귀촌센터 등에 등록(6월) 하여 지자체, 창업농 등에게 정보제공
 - (복구 후 이용 가능 농지) 식량 여건이 악화될 경우 복원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필지 관리
 - 위성·항공사진을 활용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의 신뢰도 제고, 실태조사결과 점검 강화(연중 1회 → 2회)
- 발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 정비 확대 및 기계화 촉진
 - 발기반 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(30ha 이상 → 10)하여 사업 대상지역 확대(110천ha → 180)
 - 발작물 재배방식 표준화,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·수확단계 기계 개발
 - * 기계화율('12) : (논농업) 94.1%, (밭농업) 55.7%

곡물조달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

- 실현가능한 곡물조달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('14년 예타 추진)
 - 실수요업체가 주도하는 곡물 사업, 곡물 유통망 확보방안 등 검토
 - 진입 가능한 틈새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, 점차 옥수수, 밀 등 주곡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점진적으로 역량 강화
 - * (기존) 곡물메이저가 장악한 옥수수, 밀, 콩 등 주곡 중심 → (개선) 주곡 대신 부원료, 조사료 등을 우선 추진
- 위기상황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식량안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

친환경농업 신뢰제고 및 기반 확충

-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신규 수요층 발굴
 - 인증기관 역량강화 및 심사기준개선 등을 통한 신뢰도 제고
 - *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신설(농업관련 자격증 소지 및 양성교육 이수자로 제한) 및 부정인증시 인증기관 취소 등 처벌강화(친환경농어업육성법 개정, 6월)
 - 급식관계자 대상 교육, 매체활용 홍보 등 신규 수요층 발굴
 - * 친환경 인증정보 실시간 제공, 사이버거래소에 우수 친환경농업인 홍보영상 게시
- 생산자 교육 강화 및 지원정책 내실화로 지속적인 생산기반 확충
 - 전문리더 육성(100명) 및 유기농업지원단 구성·운영(3월)
 - 재배 난이도에 따른 단가 차등화 등 친환경직불제 개편방안 마련(4월)
- 친환경농산물 판매처 확충 및 유통기반 구축
 - 친환경농산물 비중이 높은 로컬푸드 매장·직거래 사업장 개설시 자금 지원
 - * 로컬푸드 매장 / 직거래사업 지원계획 : ('14) 25개소, 45억원 / 30, 300
 - 친환경농산물 전문 취급공간(경매장, 저온저장고), 판매장 확충('14 : 6개소) 및 권역별 물류센터 설치('15년까지 2개소)

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육성

- 축종·농가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육환경 개선 촉진
 -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사육기반 조성을 위한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내실화('13: 3,014억원 → '14: 3,817억원)
 - 축사 표준설치기준 마련('14: 한우·돼지 → '15: 닭·젓소)
 - 친환경적 사육모델 정립 및 확산을 위한 산지축산 시범농장 조성('14~'16, 5개소) 및 친환경축산단지 시범 조성('14~'17, 3개소)
- 인증제 및 직불금 지원 확대를 통해 친환경축산물 공급 활성화 여건 조성
 - 연차별로 동물복지 인증 대상축종 확대(산란계·돼지 → 육계 추가)
 - 초기 소득 감소분을 감안하여 유기축산 직불금 지급단가 및 지원한도* 조정 검토
 - * 현행 : 지급단가(한우 17만원/마리, 돼지 1.6만원 등), 지급한도(호당 2천만원)
- 지역별 가축분뇨 관리체계 확립 및 악취에 대한 관리 강화
 - 시·군별 자원화계획 수립 의무화(사업지침 개정 6월) 및 분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(5월)
 - 개별처리되는 돼지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공동처리시설* 설치 확대
 - * 공동자원화/에너지화시설 : ('13) 98/8 → ('14) 113/11 → ('17) 150/21
 - 악취기준 신규 설정(14.12) 및 저감지침 마련('14.6) 등 악취 관리체계 마련

사전에방적 안전관리체계 강화

- GAP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생산·수요기반 확대
 - GAP 인증절차 통합(3단계 → 1) 및 위해요소 점검기준 강화
 - * 인증신청기관 통합, 부실인증 처벌강화 등(농수산물품질관리법, 7월)

- 작목반 등 GAP 생산조직 육성 및 관련 정책사업(36개사업)과 연계를 통해 확산 유도
 - 농가교육을 위한 컨설턴트 육성 및 표준매뉴얼 개발·보급(5월)
 - 산지 유통시설 보완('14: 27억원), 안전성 분석비용 지원(19억원)
- 수요확대를 위해 대량 수요처와 생산자간 협의회 운영(월 1회)

□ HACCP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전문 컨설팅 및 사후관리 강화

- 농가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'HACCP 표준모델' 개발·보급
 - * 연도별 표준모델 개발 : ('12) 한우 → ('13) 돼지 → ('14) 젓소농장
- HACCP 희망농가(475개소) 및 부적합 농장(375개소) 컨설팅 지원

□ 효율적인 농축산물 안전관리체계 구축

- (농산물) 학교급식 등 취약분야 집중·지속·투명 관리
 - * 학교급식 식재료, 폐광산 등 오염지역 및 방사능 조사 확대('13: 17천건 → '14: 20)
- (축산물) 기준위반 농가 집중 조사('13: 26천건 → '14: 27)

소비자 알권리 강화 및 소통채널 확대

□ 소비자 정보제공 및 소통채널 확대

- 소비자 참여형 종합정보망인 '농식품 정보누리' 본격 운영(1월~)
 - *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콘텐츠 기획·평가과정에 직접 참여
- 소비자 교육 대표 브랜드 '농식품 스마트 소비 아카데미' 개설(3월)
 - * 전문교육인력인 '농사랑 알리미' 육성('14 : 85명)

□ 원산지표시대상 확대 및 위반업체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

-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 수 확대,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 도입 등
 - * 개선안 의견수렴 및 개선안 마련(2월), 관련법령 개정안 마련(4월), 법제심사(9월)

□ 현재 표준 규격농산물에만 표시하고 있는 용량·생산자 등의 기본정보를 모든 포장 농산물로 단계적 확대

- 품목명, 내용량, 원산지, 생산자 정보 등을 포장지에 표시토록 하되, 품목별 단계적 도입 및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 연착륙 유도
 - *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(~2월), 개정안 마련(3월), 법제심사(8월), 국회제출(10월)

국민영양 및 식생활교육 강화

□ 현장·지역 중심의 식생활교육 체험·실천 환경 조성

- 소비자·식생활·생산자 단체, 지자체 등과 지역별 추진협의회 구성(3월), 바른식생활 5대 캠페인* 추진
 - * ① 텃밭 가꾸기, ② 채소·과일 균형 섭취, ③ 음식물쓰레기 줄이기, ④아침밥 먹기 및 ⑤ 축산물 저지방부위 소비촉진
- 우수 농어촌 체험공간('13: 137개 → '14: 160) 및 식생활 교육 기관('13: 50개 → '14: 60) 지정·확대
 - 농협 및 대형 유통업체 등과 연계하여 식생활 교육 추진(4월~)
 -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DB화 및 정보도서관 구축·운영(6월)
- 국가차원의 통합된 공통 식생활지침 개발 기준 마련(12월)
 - * 범부처 공동 식생활지침 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(4월~)

□ 학교급식에 우수 농식품 소비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

- 학교급식에 우수농식품(친환경·GAP 등)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개정 추진('14.3~)
- 공공분야 우수농식품 구매·급식 세부지침 제정(12월) 및 우수 식재료 공급업체 지정 확대('13: 41개소 → '14: 60)
 - * 농식품 품질·위생수준, HACCP인증관리, GAP농산물 사용여부 등 평가

8.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

(국정과제 32-1)

< 목 표 >

- ◆ 농축산물의 유통비용을 줄이고, 가격진폭을 완화하여 생산자는 제값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유통생태계 조성

1 정책 핵심 내용

- 직거래 등 유통비용이 낮은 경로를 확대하여 비용 절감, '합의·참여'에 의한 수급조절 및 도매시장의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하여 가격진폭 완화
 - 온·오프라인 직거래, 생산자단체 계열화 및 산지 직구매(B2B) 등을 확대
 - ⇒ 경쟁을 촉진하여 도매시장·대형마트 등 기존 주류 유통주체들도 유통 효율화 및 고객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동기 부여
 - 관측의 정확성을 높이고, 생산자단체의 참여에 의한 체계적인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는 한편,
 - 정가수의매매를 보다 확대하여 가격 진폭이 큰 경매제도의 단점 보완

2 그간의 성과

- ◆ 새로운 유통경로 확대로 비용 절감(로컬푸드 직매장, 안성물류센터 등)

- ◆ 과거에 비해 안정된 농산물 수급 상황(수급조절위원회·수급조절매뉴얼)



유통비용 절감

- 기존 유통경로에 비하여 비용이 낮은 새로운 유통경로 확대
 -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(3개소 → 32), 직거래 장점을 부각시켜 사회적 관심 유도
 - * 로컬푸드 직매장이 인근 대형마트보다 23.7% 저렴 ('13.11월 조사결과)
 - 농협 '안성물류센터'를 개장(9월)하여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 추진
 - * 낮은 수수료(4%) 및 물류효율화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농가 수취가격은 5% 상승, 소비자 구입가격은 6% 인하 효과 발생(한국농촌경제연구원)
 - aT 사이버거래소 기능강화(타기관 업무 제휴 등)로 B2B 거래 증가
 - * 사이버거래소 거래액 : ('12) 1.1조원 → ('13) 1.6조원(유통비 절감액 660억원)
 - 협동조합형 패키지(안심축산)를 통한 거래비중* 확대로 유통비용 절감
 - * 소/돼지 : ('12) 10.9% / 4.7% → ('13) 19.2 / 9.6(마리당 절감액 소 1,027천원, 돼지 40)

과거에 비해 안정된 수급상황

- 참여과 합의에 의한 자율적 수급관리(가격안정대 설정,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등)로 주요 5대 채소류 가격 변동성 최소화
 - 가격진폭이 심한 5대 채소(배추·무·양파·고추·마늘)의 '수급조절매뉴얼' 마련
 - * 양파 가격 급등시 위원회 합의(수매가 인상지제, 출하확대)를 통해 수입조치 없이 가격 안정화 → ('13.6월) 967원/kg(심각) → (수급조절위원회 작동) → (7월) 811(안정)
 - * 수소가격 : ('12) 530만원/600kg → ('13.3) 465 → ('13.11) 517(경영비 463)
- 경매제의 단점 극복을 위해 정가수의매매 확대 기반 구축
 - 정가수의매매 매뉴얼 마련·보급(8월),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, 전문 교육 실시 및 도매시장 평가시 정가수의매매 실적 반영 등

3 장애요인 및 개선할 점

- ❖ 직거래 및 농산물 B2B 등에 쉽게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
- ❖ 농축산물 수급불안 예상시 선제적 수급대응체계 미흡
- ❖ 경매 중심의 오랜 관행으로 정가수의매매 조기 확대·정착 미흡

쉽게 참여하기 어려운 유통 환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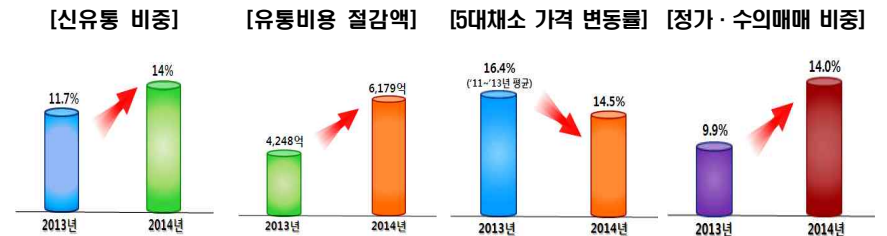
- 직거래 참여 범위가 제한적이고, '직거래'에 대한 불신도 상존
 - 로컬푸드 직매장과 같은 오프라인 직거래의 경우 공간적 제약 문제
 - * 수도권의 소비자들은 완주군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 곤란
 - 온라인 직거래는 농가의 IT 수준이 낮고, 쇼핑몰 관리·운영에 애로
 - * 농가 쇼핑몰은 7,000여개가 등록되어 있으나, 활성화된 곳은 600여개에 불과
 - 도매시장에서 구입한 농산물을 직거래 농산물로 재판매하는 경우도 발생
- 슈퍼마켓 등 중소상공인은 농산물 B2B에 참여하기 불편하고 까다로워* 대부분 유통비용이 높은 도매시장을 통해 구매
 - * 슈퍼마켓 내에 별도의 컴퓨터를 설치해야 하고, 매입을 위한 담보설정 필요
- 생산자단체의 소매 판매망이 부족하고 대규모 신규 수요처 발굴이 어려워 유통계열화 조기 확대 정착에 한계

선제적 수급대책 및 정가수의매매 미흡

- 수급불안이 예상되어도 생산량 조절 등 선제적 수급 대응 미흡
 - 관측정보의 정확도가 생산자의 기대에 비하여 낮은 수준
 - 생산자 단체를 통한 관측정보 수집·전파 기능 미흡
 - * 원예농산물(24품목) 자조금 제도가 시행중이나 대부분 소비촉진 용도로 사용
 - 가격진폭이 큰 채소류 생산농가의 대부분이 영세하고 조직화가 미흡하여 생산량 조절 등을 위한 자율적 의사결정 곤란
- 정가수의매매 경험 및 동기 부족 등으로 조기 확대·정착 애로
 - 30여년 간 정착시킨 경매 거래 관행을 단기간 내에 바꾸기에는 생산자·도매시장 관계자와의 공감대 형성 및 동기 부족
 - * 정가수의매매 비중 : ('11)8.5% → ('12) 8.9% → ('12.8월 제도도입) → ('13) 9.9%

4 2014년 중점 추진계획

- ❖ 지난해 수립한 「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」 추진을 통해 나타난 성과는 극대화하고, 장애요인 및 개선점은 보완·발전
- 신 유통경로 확대, 사전·자율적 수급정책 및 정가수의매매 확대 중점 추진



직거래 등 신(新) 유통경로 확대를 통한 비용절감

- 온·오프라인 직거래를 확충하여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, '직거래'에 대한 신뢰를 높여 소비자 참여 유도
-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* 구축(8월) 및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(30개소)

* 직거래 플랫폼 : G마켓 등의 오픈마켓과 유사하나, 가장 큰 차이점은 플랫폼에 참여한 쇼핑몰 운영자(창업희망자 등)들은 자기 소유의 농산물이 없어도 농가가 플랫폼에 등록시킨 수많은 상품 중에서 자기가 팔고자 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입점 시킨 후 판매 → 단일 상품이 여러 쇼핑몰에서 판매 가능하며, 농산물 구매 자금 및 재고부담 없이도 쇼핑몰 운영 가능
(기대효과) 1. 농가판로확대 2. 무자본 창업가능 3. 소비자 가계안정

- 「(가칭)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정(연말)
 - 직거래 개념 정의, 우수 직거래 사업자 보호·활성화를 위한 인증제 도입 등
- Pos-Mall*을 구축(9월)하여 슈퍼마켓 등의 중소상공인이 편리하게 농산물 B2B(산지유통조직 → 슈퍼마켓)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* Pos-Mall : 슈퍼마켓 점주가 매장 내에 B2B를 위한 별도의 컴퓨터 없이도 Pos(판매단말기)를 통해서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Pos-Mall에 입점된 농산물을 구매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(도매시장 미경유)

- 생산자단체를 통한 계열화 확대를 위하여 외식업중앙회 등 대량 수요처를 신규 발굴하여 판로 확대 추진
- 축산물 패커의 유통비용 절감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 계열 소매점 확대 * 목표 개소수 : 정육점 700개소/정육식당 440개소

사전적·자율적 수급안정 및 정가수익매매 확대를 통한 가격진폭 완화

- 관측의 정확성·활용도 제고, 생산자단체 자율적 수급참여 확대
 - 무·마늘·배추·양파의 단위당 수확량 예측모형 현장 적용(12월)
 - 모바일용 앱(4월) 및 SNS, 채소류 자조금단체 등을 통해 관측 정보 제공 확산
 - 금년부터 5개 품목(고추, 마늘, 양파, 무, 배추)은 자조금 사업 추진 시 관측정보 확산(4월~, 매월)을 위한 사업비 배정
 - 재배의향 면적신고·출하조절 등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수급 참여 유도
 - 출하조절 참여 농가에 적립금을 활용한 인센티브 지원(약제비 등)
 - * 주산지 형성으로 농가조직화가 용이한 고랭지(8월)·월동배추(12월)부터 시범 실시
 - 농협 계약재배 규모 확대(평년 생산량 대비 계약재배 비율 : 14.5% → 18.0)
 - 축산물(한우·돼지·낙농·닭·오리·계란) 수급조절매뉴얼 마련(6월), 5대 채소 수급조절매뉴얼 보완(위기가격 조정, 시장개입 기준 설정 등)
- 정가수익매매 거래물량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, 인프라 확충, 판매자 이해 제고 및 인센티브 지원 등 추진
 - ICT를 활용하여 정가·수익매매 거래 중개를 위한 산지-도매시장 간 예약거래·출하정보 제공시스템 구축(9월)
 - 도매시장 정가수익매매에 필요한 저온저장고 등 시설 사용료(5%) 감면(농안법 시행규칙 개정, 11월), 대금 정산조직 활성화
 -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와 연계하여 저온저장고 등 물류인프라 확충
 - 생산자·산지유통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
 - 정가·수익매매 요령 및 활성화 방안 교육 실시(3월~)
 - * 정가수익매매 확대를 위해 우수 산지유통조직에 대한 평가인센티브(금리) 강화

9. 국제농업협력 및 해외농업개발 확대 [국정과제 39-3/4]

< 목 표 >

- ◆ 개도국과의 농업협력 체계화, 해외 곡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충 및 남북간 농업협력 기반 마련

1 정책 핵심 내용

-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해외농업개발 효과성 제고
- 가축질병, 식량안보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동북아 농업협력 강화
- 남북간 긴장해소와 북한 식량난 완화 등 남북 공동이익을 위한 상호보완적 농업협력 방안 모색

2 그간의 성과

- 125개 기업이 25개국에 진출하여 284천톤의 곡물 확보
 - * 곡물확보량 : ('10) 107.7천톤 → ('11) 170.7 → ('12) 218.2 → ('13) 284.2
 - * 개발 면적 : ('10) 26.9천ha → ('11) 42.3 → ('12) 64.4 → ('13) 69.7
- ODA 예산 확대에 따라 일회성·소규모 프로젝트에서 탈피, 농정 컨설팅 등 사업방식을 다양화하고 관계부처 협업 사업 전개
 - * 농업분야 ODA 지원 : ('10) 42억원 → ('11) 100 → ('12) 105 → ('13) 128
- 관계부처 협업으로 미얀마 새마을운동 ODA 사업 전개
 - * 농업·의료 등 패키지 지원, 우리부는 농촌개발 및 영농기술 전수('13~'16, 28억)
-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(KOPIA, 20개국) 및 대륙별 농업현안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(아시아 11개국, 아프리카 18개국) 운영
 - * 맞춤형 지원 : 볼리비아 감자 생산성 5.6배 및 DR콩고 옥수수 수량 71% 향상 등

- 북한에 식량·비료 등 인도적 지원 및 농업협력 추진

- (인도적 지원) '95년부터 '10년까지 식량 2,855천톤(쌀 2,655, 옥수수 200), '99년부터 '07년까지 비료 2,515천톤 지원
- (당국간 합의) '05.8월 남북농업협력위원회에서 남북간 농업분야 협력에 합의*, '07.12월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에서 이를 구체화
 - * (주요내용) 협동농장 육묘시설, 영농 자재·기술, 종자정선·유전자원저장고 지원, 산림자원 보존 협력, 축산·과수·채소·잡업·특용작물 분야 협력 등

3 장애요인 및 개선할 점

-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이 현지 제도·관행 등에 관한 정보 부족, 인허가 지연, 복잡한 통관 절차 등으로 현지 정착 애로
 - 투자회수에 장기간 소요되고 기후변화 등 위험요소 상존
 - 세계 경기침체, 곡물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투자유인 감소
 - * FAO 식량가격 지수(평균) : ('11) 227 → ('12) 212 → ('13) 210 → ('14.1) 203
- 가축질병, 식량문제 해결 등과 관련하여 동북아 농업협력 미흡
- ODA는 국내 주요 농정과제(해외농업개발, 농자재 수출, 동식물질병 예방 등)와의 연계가 부족하고, 수원국과의 상생협력 미흡
 - 사업 발굴 단계부터 목표지향적으로 기획하고, ODA 관계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필요
- '05·'07년 남북간 합의를 통해 구체화된 남북농업협력 사업이 남북관계 경색으로 실현되지 못함
 - 장기간 협력이 중단됨에 따라 대응조직체계 미흡, 전문가 부족
 -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 발굴 필요

4 2014년 중점 추진계획

❖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 애로해소 및 민관협업으로 성과 제고

* 해외농업개발 확보 물량 : ('13) 284천톤 → ('14) 300 → ('17) 1,280

❖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 확대 및 식량안보 등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 강화

❖ 남북교류 확대에 대비하여 남북농업협력 준비

해외농업개발 지원 강화

□ 진출 기업에 대한 현장밀착형 지원 및 민·관 협업 체계 구축

- 중점 진출 지역에 영농지원센터 설치('14: 연해주)
 - 진출국 행정업무 지원, 기술지도, 농자재 공동 구매 등 사업준비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현지 기업 애로 해결
- 생산(연해주)·유통·국내 수요업체 3자간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곡물의 안정적인 국내 반입 기반 조성
 - * 우리부와 3자 기업 합동으로 연해주 생산현장 및 물류 실태조사 실시(3월)
- 할당관세(TRQ) 물량 활용, 수입권 배정 등을 통해 해외농업개발로 확보된 곡물의 국내 도입 활성화
- 해외조림 확대를 위해 동남아, 중남미 등으로 투자지역 확대
 - 해외 산림자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턴 증원(25명 → 33명)

□ 해외농업개발, 개도국 원조(ODA), 농자재 수출 등 연관산업의 동반 진출을 통해 사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

- 연관 기업의 패키지 진출을 유도하고, 협력 모델 구축
 - * 미얀마 사례('13) : ODA 지원, 해외농업개발 진출 → 농기계 수출(콤바인 400대, 한중일 기업간 경합에서 낙찰)
- KOPIA 활용 진출기업에 농업기술 지도 및 농자재 수출 측면 지원
 - * 베트남에서 우리 채소 품종(무, 고추)이 국가 장려 품종으로 지정·보급되도록 협의

동북아 농업협력 강화

- AI, 구제역 등 가축질병 유입방지를 위한 국제워크숍, 공동연구, 국가간 공조 등 실질적 협력 강화
- 국제회의, 양자간 농업협력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위생검역기준 정보교류 확대 등을 통한 농식품 교역 촉진
- 익산에 설립·운영될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동북아 식품산업 협력 기지로 활용

국제농업협력사업 확대

- 농림업 분야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사후관리 및 평가·환류를 강화
- ODA, 유상원조(EDCF), 민간투자를 연계하여 패키지형 사업 추진
 - * 안행부, 가나안농군학교 등과 협력하여 미얀마, 라오스 대상 농촌개발, 영농기술전수, 농업농촌 역량개발 등 새마을운동 연계 시범사업 추진
- 협력대상국에 대한 정보공유체계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
 -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를 설치(1월, KREI)하여 협력 대상국의 농업관련 정보를 수집·DB화하여 관계기관에 제공
 - 민·관 교류를 위한 '국제농업협력 파트너십 포럼'을 구성(4월)

- 개도국 기술공여(KOPIA, 20개국) 확대를 위해 **현지 농가 참여형 시범단지 조성** 및 농과계 대학생 기술연수(120명)

* 시범단지 조성 : 베트남 신선채소 재배 시범 등 10개국

○ 사막화 방지 사업을 몽골에서 **아프리카와 중남미로 확대**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

* 사막화 방지 협력사업 : ('13) 가나 등 3개국 → ('14) 페루 등 7개국

- 한국국제협력단(KOICA)과 협업하여 **산림분야 ODA 사업**을 적극 발굴·추진하고, **협력대상 국가 확대**('13: 28개국 → '14: 30)

□ 국제기구와의 **공동 협력사업을 확대**('13: 3건 → '14: 4건)하고, 식량안보 등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**국가 간 협력 강화**

* FAO와 '아프리카 지속가능한 농업개발 사업' 신규 추진('14~'17)

* ASEAN+3 식량안보정보시스템(AFSIS) 구축 지원('14~'16)

남북농업협력 준비

□ 남북교류 확대에 대비하여 **남북농업협력 추진체계 구축**

○ 농식품부, 농진청, 산림청, KREI, 농어촌공사, aT, 농협 등 관계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**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** 및 추진단 구성

- 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 및 기관별 중점 지원·협력사업 준비

* 통일농업전문가포럼(KREI), 남북농업협력지원단(농진청), 남북공동산림녹화사업단(산림청), 남북농업개발사업단(농어촌공사) 설치

□ 주민 체감형 사업 발굴 및 단계적 **남북농업협력 추진방안 마련**

○ 과거 **협력 경험이 있는 사업**부터 발굴하고, NGO나 국제기구 등과 협력 주민 생활향상을 위한 농축산·산림협업 추진

* 온실·농자재(종자, 농기구 등) 지원을 시작으로 공동영농 시범사업 확대

* 시범조림 및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 추진을 통해 그린데탕트 사업으로 발전

IV. 일하는 방법 전환

1. 경영체 DB 활용을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
2. 지역과 경영체의 자조자립 노력 및 책임성 제고
3. 위기 극복을 위한 역량 결집 및 협업 강화

1. 경영체 DB 활용을 통한 비정상 사례 정상화

농업 보조금 및 면세유 등에서 비정상 사례 발생

정보부족(150만 경영체)과 사전 검증체계 소홀,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재정 낭비·비효율 발생

보조금 유용, 면세유 부당사용 등 투용자 성과 미흡



개별 재정지원 정보와 경영체DB를 통합, Big Data 분석으로
누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

1 비정상 사례

- (보조금 부정수급) 사업관리에 대한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, 농업·농촌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효율성, 누수·낭비 문제 지속 제기
 - 농업 정책자금 관련 체계적인 집행관리 미흡, 도덕적 해이 등이 맞물려 보조금 부당수령 문제 반복 발생
 - * 전라남도 관내 민간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 907개 표본조사 결과 88개가 승인 없이 근거당 설정 또는 제3자에게 처분(감사원 감사, '13. 9)
 - * 농업·농촌에 대한 보조 지원은 '눈먼 돈'이라는 일부 언론의 지적 등
- (면세유 부정사용)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용 면세유 사용량은 감소 추세이나 면세유류 부정사용 사례 지속 발생

- * 제도개선 :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로 한정, 신규난방기에 시간계측기 부착, 부정유통 처벌 강화(가산세 추징, 2~5년간 공급중단 등)
- 면세유 공급량 : ('05) 260만kl → ('10) 192 → ('12) 176 → ('13) 171
- * 면세유 부정사용 적발(건, 물량, 금액) : ('11) 215건, 2,538kl, 2,530백만원 → ('12) 339, 1,504, 1,558 → ('13) 563, 5,357, 5,258

□ (마권 구매상한 미준수)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1회당 마권 구매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미준수 사례 빈발

- * '13.12월 경마장·장외발매소 17회 점검 결과 마권구매상한 미준수 사례 282건 적발(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)

2 2014년 중점 추진계획

DB 구축 및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농정

- 경영체 DB 기반 지원사업 통합 관리, 성과 점검 및 경영체 유형화 등을 통한 맞춤형 농정으로 투용자 성과 극대화
 - 농업경영체 통합 DB 확대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
 - 경영체 DB 등록정보와 직불제 등 각종 정책사업 연계·통합
 - * 보조시설 전수조사(4월) → 경영체 DB와 면세유 등 26개 사업 연계(4월) → 22개 사업 통합(12월) → '16년까지 전체 재정사업으로 확대
 - 경영체 등록과 4개 직불금 신청을 통합, 윈스톱 서비스로 농업인 편의성 제고 및 자격·수급이력 확인으로 부당신청 사전 방지
 - 정책사업별 자격·요건과 농업경영체 DB를 대조하여 경영체별로 지원 가능한 사업목록 일괄 안내 시스템 구축(12월)
 - 지원사업 성과 점검을 위한 '농림사업정책평가단(가칭)' 설치

- 수요자 입장에서 정기적으로 **정책(사업)을 평가**하고 계량화된 성과를 바탕으로 **관련정책을 개선**토록 필요자료 DB 구축·공개 실시

* '14년 상반기 중 근거법령 개정, 하반기에 조직·예산 등을 정비하여 '15년부터 운영

○ DB를 활용한 **농림분야 Big 데이터 구축·활용 기본계획** 수립(3월)

- 진흥청, 산림청, 농관원, KREI 등 유관기관 농정 데이터를 통합 활용하여 지역·농가별 **대국민 서비스 제고** 방안 마련

농업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

□ 재정사업 관리체계 조기정착 및 제도 보완 등을 통해 누수 되는 재정을 차단, 농식품 경쟁력 제고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

○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시행(1월~)

* 유사자금 편중·중복지원 제한, 담보제공 승인기준 마련, 보조시설 현황 지자체 홈페이지 공시 등 재정사업 관리체계 보완

* 각 사업별로 전문 담당과 지정, 예산 편성·집행·사후관리·평가 의무화

- 보조금 관리체계 개선사항 시도별 설명회(2~3월) 및 주요 사업 현장점검·평가(2~4월) 후 예산편성시 검토·반영

○ 지자체 보조시설 관리현황 재정비 추진

- 농업정책자금 지원시설 시·군 관리대장 표준양식 배포(1월)
- 건물, 시설, 장비 등 보조시설 현황 등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시(6월)하고 표준양식에 따라 관리대장 재정비(8월)
-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**부기등기(附記登記) 도입**, 담보제공, 처분 제한 등 사후관리 강화

*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(12월)

○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활용, 중복·편중지원 및 낭비요인 제거

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사용 근절

□ 농업경영체 DB 등록정보 등을 활용하여 적정량의 면세유 공급,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면세유 부정사용 근절

○ 농기계 보유대수와 재배면적 정보 등 통해 **과다신청**을 한 경우, **현지 확인** 등을 통해 **비정상 요인 사전 제거**

- 농기계 보유 신고시 **현장실사 강화**(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개정, 3월)

* 트랙터 등 사용량이 많은 기종을 중심으로 현장실사 결과 보고 의무화

- 폐농기계 재신고 등 **보유현황 신고 강화**(농림특례규정 시행규칙 개정, 6월)

* (현행) 2년 → (개선) 트랙터, 콤팩트 등 주요 농기계 1년, 그 외 2년

○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적정사용 및 부정방지 교육(연중, 농촌진흥청)

마권 구매상한 미준수 행위 근절

□ 경마 구매상한 제도개선(7월), 장외발매소 환경개선 등을 통해 범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 및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

○ 개인 실명확인 등을 통해 구매상한을 강제할 수 있도록 **전자카드 제도 도입**('11년부터 일부 장외발매소에서 시범실시 중)

*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(2월 예정) 결과에 따라 추진

- 전자카드 도입에 따른 매출 감소를 보완하고 구매자 자율규제 정착을 위해 **온라인발매제** 도입 근거 마련(한국마사회법 개정)

*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'온라인베팅의 문제점 및 시사점 분석' 연구(7월까지) 결과를 한국마사회법 개정시 반영

○ 구매상한 준수를 위한 계도·홍보 등 **관리감독 강화**(연중)

○ 경마장, 장외발매소를 복합문화·건전레저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**환경개선**을 통해 쾌적한 관람분위기 조성(연중)

2. 지역과 경영체의 자조·자립 노력 및 책임성 제고



1 현황 및 문제점

- 지역별 특성에 맞는 농업·농촌 정책을 **자율적이고 체계적으로** 수립·추진할 수 있는 **제도적 기반 미흡**
- 각종 법률과 지침에 따라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**예산과의 연계 미흡** 등으로 **실효성 미흡**
- 각종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사업간 연계·조정을 통한 **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시너지 효과 창출 미흡**
 - * 유사·중복 투자, 지역여건 및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**과잉투자** 등으로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및 **정책의 사각지대 발생**
- 상향식 농업인 대의기구 모델인 **농어업회의소**에 대한 농업인 등의 **관심·참여가 부족**하며, 농정 파트너로서의 역할 수행 미흡

- 후계인력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, 신지식농업인, 농업마이스터 선정·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
 - * '13년 신규 후계농(1,849명), 신지식농업인(21), 마이스터(102)
 - * 현장실습장(WPL) 지정·확대 : ('10) 45개 → ('13) 91
- 문제 발생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요구 등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의 **자조·자립 노력 미흡**

2 2014년 중점 추진계획

< 목 표 >

- ❖ 지역·경영체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**종합지원체계** 확립으로 **정책의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**
- ❖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경영체의 **자율성·책임성 강화**

- 지자체 자율성·책임성 제고를 위해 시·군별 **중장기 계획**에 기반한 **상향식 예산지원 체계 도입** 및 **농정 거버넌스 구축**
- **지역별 비전·특성을 반영**하고 시·군의 각종 계획을 하나로 통합한 「**시·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**」 수립
 -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5년단위('15~'19) 시·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지침 마련(4월) 및 지자체 설명회(5월)
 - * 통합대상 계획(안) : 포괄보조 5개년 계획, 삶의 질 향상 계획, 생활환경정비, 경관관리, 주거환경개선 등
- 계획과 재정지원 간 연계를 강화한 **상향식 지원체계 구축**
 - 포괄보조 사업을 시·군 발전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선정·운용
 -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수립한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**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시범사업** 추진

* 시범사업지침 마련 및 지자체 설명(1월), 시·도 계획수립 및 신청(3월초), 시·도 계획 심의 및 대상 지자체 확정·지원(3월말)

* 사업 운영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(수시)과 지역맞춤형 농정 지원체계 도입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시범사업 계획 수립(10월)

○ 정부·지자체의 농정 파트너로서의 역할강화를 위한 **농어업회의소 활성화** 방안 마련(9월)

□ 지역개발 지원을 주민 역량에 따른 **단계별 지원방식**으로 전환

○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 추진기반인 **현장포럼**(350개소) 실시 및 현장활동가(누계 1,350명) 육성

○ 마을개발 사업유형을 통합하여 역량단계별 지원방식으로 개편
* (기존) 개별 사업단위 지원 → (개선) 단계별 지원(예비 → 진입 → 발전 → 자립)

□ 농업경영체의 **역량 강화** 및 **자율성·책임성 제고**

○ 농고·농대생의 농업분야 취업·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체계 정비
* 농고 실습시설 개보수, 농업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(교육부 협의), 농고-농대 연계 교육과정 운영 등 **현장실습 교육 강화**

○ **우수후계농 인증**(7월)으로 후계농·우수농업인 사후관리 강화
*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인에 대해 저리(1%) 정책자금, 교육, 컨설팅 등 지원

○ 수요자 중심의 현장교육을 위해 마이스터대 및 현장실습장 확대 운영
* 농업마이스터대학 : ('10) 9개소, 705명 수료 → ('14) 29개소, 1,869명 수료예정
- **농업마이스터, 신지식농업인** 등의 **지식전파 역할** 강화를 위해 **상설교육장**을 마련('14: 5개과정)하고 **멘토링제** 운영(4월~)

○ 브랜드경영체, 자조금 단체, 들녘경영체 육성·지원 등을 통해 **품목별 생산자단체 조직화·규모화**

⇒ **생산자단체와 주민이 협력하여 스스로 하려는 곳에 재정 집중지원**

3. 위기극복을 위한 역량 결집 및 협업 강화



1 현황 및 문제점

□ 농업·농촌 문제는 농식품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 곤란, 관련 부처, 지자체, 공공기관, 단체 등과 **긴밀한 협력 필요**

○ 정부3.0 계획에 따라 **부처 협업과제 9개 발굴·추진, 2개 과제** (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마련,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등 사유시설 피해지원 개선)는 **완료**, 7개 과제*는 추진 중

* 농식품의 6차산업화,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관리체계 구축, 농촌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, 기초생활보장제도 농촌특례 확대 등

□ 국민 눈높이와 다른 공공기관 특혜, 방만 경영 등으로 농정신뢰 하락

□ 농정문제 해결을 위한 농식품부 유관기관 간 **협력체계 미흡**

2 2014년 중점 추진계획

< 목 표 >

- ❖ 국민 눈높이와 다른 공공기관 특혜 폐지, 방만 경영 정상화·효율화 추진과 함께 농업위기 극복을 위해 역량 결집
- ❖ 부처 내외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및 농업·농촌 문제 해소

공공기관 정상화

□ 방만 경영 효율화, 인사·채용비리 척결 등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

- 방만 경영 정상화(6월 완료)
 - 공상 퇴직, 순직시 퇴직금가산·유족보상금 폐지
 - 자녀 학비 과다 지급 개선, 가족 건강검진비 폐지
 - 휴가 사유·기간, 휴직 중 급여 기준을 공무원수준으로 조정
- 인사·채용 등 각종 비리 척결
 - 유가족 특별채용 폐지, 채용기준·절차 외부 공개 등 인사제도 개선
 - 공공기관 직접사업은 수입권 공매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민간이양
 - * 인사·사업 비리 재발시 기관장 문책 및 관련자 엄벌
- 부채관리 강화
 - 공공기관 순수부채 비율을 30%이내로 유지
 - * 사업구조조정, 자산매각, 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부채규모 최소화
 - 농어촌공사의 정부대행사업 부채는 중전부동산개발사업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공사채 조기상환 추진
- 공공기관 관리·감독 강화
 - 노조설명회 등 노사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상화 방안을 공유하고, 1/4분기 내 방만경영 개선계획 합의 추진

- 기관별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상황 주간 보고 등 모니터링
 - * 분기별로 기관장회의 개최, 추진실적이 미흡·부진한 기관장 및 임원은 인사·성과급 등에서 불이익 조치
 - *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(마사회, 유통공사)에 대해서는 이행상황을 3분기말 중간평가 하여 부진기관은 기관장 문책 등 조치

□ 경영합리화를 통해 농정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

- 6차산업화(농어촌공사), 수출시장개척(유통공사), 말산업 육성(마사회), 유통구조 개선(농협·유통공사) 등 국정과제 성과달성에 기능을 집중

부처 내외 역량 결집 및 협업 강화

- 농촌 복지·교육·문화 등 범정부협업체인 삶의 질 위원회(위원장: 총리)의 총괄·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부처간 협업 및 위원회 운영 활성화
 - *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(15~19) 수립, 분과위 설치 등 추진체계 개편방안 마련
- 중점 협업과제를 발굴·추진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극대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창출
 - 정부3.0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부처 협업과제 발굴·추진(2월)
 - * 협업분야 : 농촌고령자 복지(복지부, 문체부), 농촌관광 활성화(문체부), 농공상·수출·R&D(산업부, 중기청), 농업재해 손해평가기법 개발(미래부, 농진청)
 - 자연재해, 가축전염병 등 재난발생시 관련부처,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국민불편 최소화 및 효율적 위기관리 체계 구축
 - 농정전략협의회(정부3.0 총괄기능 병행) 활성화를 통해 양청, 산하·공공기관, 농협 등 농식품분야 유관기관 역량결집 및 협업 강화
 - 협업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 점검, 우수사례 발굴, 포상 등
 - * 협업과제 : 품질안전(농관원, 검역본부, 축산물품질평가원, 식물검역인증원), 교육(교육원, 농정원, 농수산대학, 농진청, 공사), 복지(농협, 자원봉사단 등)
- 지역농정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업체계 구축
 - * 주요 현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 수렴 및 정책 집행단계 애로사항 해소